

법무법인(유) 율촌

제 47 대 미국 대통령

Donald J. Trump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2024.11.06

법무법인(유) 율촌



목차

결과 대선 및 상·하원 선거 결과

제47대 대통령과 상원 선거 결과 5

정책 트럼프 당선에 따른 4대 정책 전망

[들어가며] 상원 선거 결과의 의미와 트럼프 정책의 특징 8

1. Redwave 달성의 의미 8
2. 『실리주의자』 트럼프 재선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11

Ⅰ. 대(對)중 봉쇄를 통한 패권경쟁 우위 선점 전략 15

1. 제47대 美 대통령의 Decoupling 전략 15
2. 제45대 美 대통령 재임 당시 트럼프의 정책 기조 16
   - ① 통상 16
   - ② 안보 22
3. 트럼프 재선 후 관전 포인트 5가지 26
   - ① 중국 플러스 원으로 부상할 지역 26
   - ②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 영향 인물(예상) 30
   - ③ 중국 직구 플랫폼 규제 31
   - ④ 중국의 규제 우회 전방위 차단 32
   - ⑤ 미국 대(對)중 봉쇄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33

Ⅱ. 美 통상 압력, 예의주시 필요한 보호무역 조치 38

1.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와 관세장벽 강화 38

Ⅲ. 美 최우선 에너지 정책을 위한 화석연료 회귀 41

1. 환경규제 철폐・축소를 통한 화석연료 부활 가속화 42
   - ① 기후변화 관련 협약 탈퇴 및 환경 규제 축소 예정 42
   - ② 화석연료 시추 증가 44
2. IRA 법안 폐기 및 축소 가능성 45
3. 원자력 발전 촉진 정책 추진 47
   - ① 원자력 발전 촉진 47
   - ② 소형모듈원전(SMR) 전환 가속화 48

4. 향후 4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위축 49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동향 49
② 태양광 발전 50
③ 풍력 발전 51

Ⅳ. 미국의 對적성국 정책 53

1. 지역분쟁과 미국 대외정책 전망 53
① 러-우 전쟁과 NATO 동맹 53
② 중동분쟁 및 對이란 정책 54
③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책 55

산업영향 트럼프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Ⅰ. 반도체 59

Ⅱ. 자동차 60

Ⅲ. 이차전지 62

Ⅳ. 철강 67

Ⅴ. 정유·석유화학 69
① 정유업계 69
② 석유화학업계 70

Ⅵ. 원자력 및 SMR 73

Ⅶ. 신재생에너지 75
① 태양광 발전 75
② 풍력 발전 76

Ⅷ. 방위산업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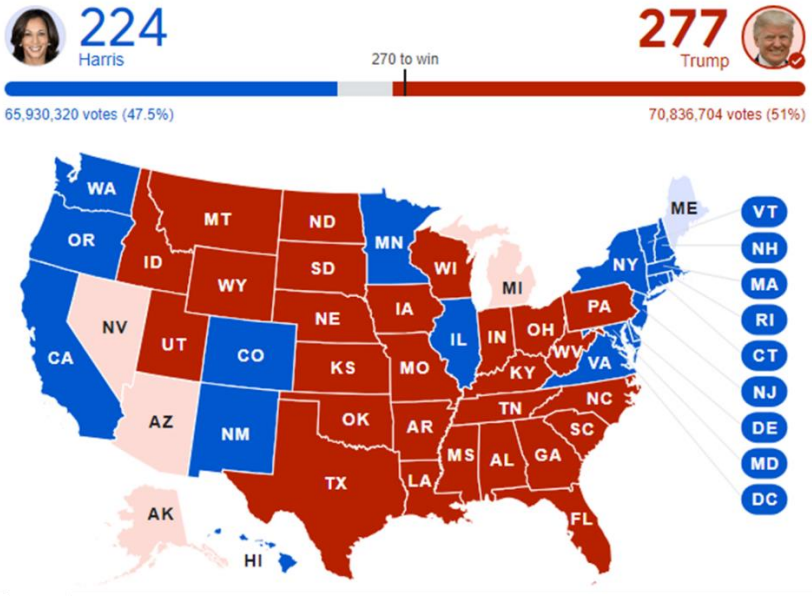
Ⅸ. 건설업·건설기계 79

대통령 및 상원 선거 결과

제 47 대 대통령과 상원 선거 결과

대통령 선거

(총 선거인단 5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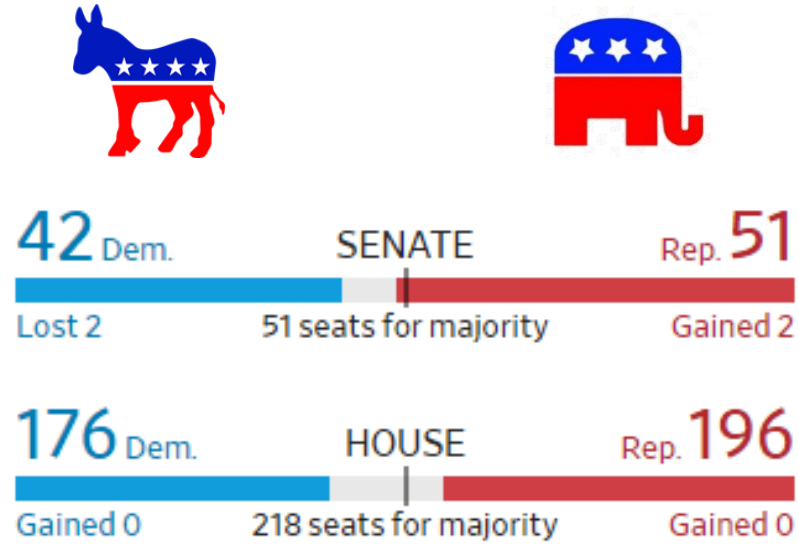


※ 출처: NYT

※ 2024.11.6.(목) 19:40(한국시간 기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매직넘버"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 270명)를 넘어서는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현재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선거 주의 결과에 관계없이 제47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됨

상·하원 결과

(양원 최종 의석 수는 잠정치)



※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 지난 11.5 미 대선과 동시에 치뤄진 연방 상·하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최소)을 차지하면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4년 만에 탈환. 총 435명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는 2024.11.6.(목) 19:40(한국시간 기준) 현재, 공화당 196석, 민주당 176석을 차지해 공화당의 하원 과반(218석)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공화당은 백악관(대통령)과 의회 권력(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레드 웨이브(Red Wave)"를 달성할 수 있음

주(州)별 대선 결과

(개표 현황 기준일: 2024.11.06)

Trump	
주(州)명	선거인단수
텍사스	40
플로리다	30
펜실베이니아	**19**
오하이오	17
조지아	**16**
노스캐롤라이나	**16**
미시간	**15**
애리조나	**11**
테네시	11
인디애나	11
위스콘신	**10**
미주리	10
사우스캐롤라이나	9
앨라배마	9
루이지애나	8
켄터키	8
오클라호마	7
네바다	**6**
유타	6
캔자스	6
아이오와	6
아칸소	6
미시시피	6
네브래스카	5
몬타나	4
아이다호	4
웨스트버지니아	4
와이오밍	3
노스다코타	3
사우스다코타	3
알래스카	3
확보 선거인단	**312**

Harris	
주(州)명	선거인단수
캘리포니아	54
뉴욕	28
일리노이	19
뉴저지	14
버지니아	13
워싱턴	12
매사추세츠	11
콜로라도	10
미네소타	10
메릴랜드	10
오리건	8
코네티컷	7
뉴멕시코	5
하와이	4
메인	4
뉴햄프셔	4
로드아일랜드	4
버몬트	3
델라웨어	3
컬럼비아 특별구	3
확보 선거인단	**226**

※ 붉은색 박스=경합주(Swing State)

※ 일부 주(州)는 개표 진행 중으로
확보 선거인단 최종 수치는 소폭 변동 가능

트럼프 당선에 따른 4대 정책 전망

[들어가며] 상원 선거 결과의 의미와 트럼프 정책의 특징

Ⅰ. 대(對)중 봉쇄를 통한 패권경쟁 우위 선점 전략

Ⅱ. 美 통상 압력, 예의주시 필요한 보호무역 조치

Ⅲ. 美 최우선 에너지 정책을 위한 화석연료 회귀

Ⅳ. 미국의 對적성국 정책

[들어가며]
상원 선거 결과의 의미와 트럼프 정책의 특징

1. Redwave 달성의 의미

< ***Redwave*** *: 공화당이 대선과 상원, 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는 상황* >

○ **상원의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과반을 탈환하며 트럼프의 정책 추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금번 상원의원 선거는 전체 100석 중 34석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공화당은 오하이오 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승리하며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음
-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상반되어 의회의 지원을 받지못할 경우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한계[1]가 있는 반면, 금번 공화당의 상원 장악으로 트럼프는 적어도 향후 2년간 상원의 법안 발의-의결 등 법 제·개정 및 폐기 등을 통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공화당이 상원 뿐만 아니라 하원도 장악할 경우 세입·세출 및 예산 관련 법안 또한 트럼프의 관련 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음**

- 미국의 양원은 입법부로서 법안의 발의·심의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상원은 ▲공무원의 탄핵 심판권 ▲국제 조약 비준권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 및 연방 대법권 임명 승인권을 전유하고, 하원은 ▲정부 예산의 심사·승인 ▲세입징수 제안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권을 부여 받음
- 공화당이 상원 뿐만 아니라 하원도 장악할 경우, 공화당은 트럼프의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예산 심사·승인권(하원)과 국제조약 비준권(상원)을 통해 IRA 폐기(또는 축소), 법인세 인하, 메디케어법(오바마케어) 개정, 파리 기후협약 탈퇴 등 트럼프 공약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1]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각 州의 법원이 결정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다만, 연방법원이 판결을 통해 효력을 인정하면 다른 법원이 결정한 효력 정지를 무효화할 수 있음

○ **트럼프는 양원 과반 확보상황을 활용하여 임기 초반 경제정책 관련 공약 법제화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통상 및 외교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행정·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 정책 추진을 우선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트럼프 1기에 시행한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강화·연장하고,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바이든 정부에서 증세했던 고소득 과세 또한 집권 초기에 우선 폐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행정명령으로 불법이민과 입국 장벽을 높인 이후 통상 관련 대중국 60% 관세와 보편적 관세 10%를 추진하고, 세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IRA 보조금 축소 또는 법안 폐지, 메디케어(오바마 케어) 축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또한 예상됨

[공화당의 상원 장악에 따라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법안·정책]

법안명 / 국회 권한	예측	사유
Affordable Care Act (ACA) *※ 오바마케어*	폐기	▪ 트럼프 1기 당시에도 ACA 폐기를 시도했으나, 상원의 반대로 실패 ▪ 당시에도 ACA를 대체할 미국건강보험법(AHCA)을 제시한 바 있고 금번 선거 과정에서도 ACA 폐기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어, 공화당의 상원 장악이 법안 폐기 가능성을 높임
국경 강화 예산 확보	시행	▪ 트럼프 1기에도 시민권·영주권 취득을 강하게 규제하고,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지시한 바 있음 ▪ 트럼프는 자신의 이민 관련 정책이 불법이민 차단과 범죄자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이민자가 미국인, 특히 백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기저에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불법적 이민 뿐만 아니라 합법적 이민까지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중 ▪ 또한 트럼프 1기의 국경 장벽 강화 행정명령은 엘패소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중단[2]되었으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국경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관련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2]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확보한 국방부 예산 전용으로 장벽을 건설하려고 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실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이 설치될 앨패소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국회 동의 없이 국방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함

법안명 / 국회 권한	예측	사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지출유예 통제법 (ICA)	개정	▪ 트럼프 당선인은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명명하며 이를 폐기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IRA 예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하지만, 공화당 우세 지역이 IRA의 혜택을 보고 있어 당 내부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고, 이미 배정된 예산을 환수하는 것은 지출유예통제법(ICA)에서 금지됨 ▪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시절 ICA 위반으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된 바 있어, ICA의 관련 법조항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 IRA는 공화당 지역이 수혜를 입은 점, FEOC guidance를 통해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점, 미국의 거대 석유화학기업들이 IRA 폐기를 반대하는 점[3] 등으로 미루어, 법안의 폐기보다는 전기차 관련 혜택 축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단, 선거과정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합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전개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 입장이 일부 변화된 측면도 있음

○ **다만, ▲미국인의 일자리 ▲미국의 경제적 이익 ▲중국 견제와 관련된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바이든 정부는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을 입법·시행하여 주요 SOC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는데, 본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아 입법되었고, 트럼프 또한 미국인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CHIPS Act 또한 트럼프 1기 당시 준비되었고,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高관세 정책 및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관세[4] 또한 현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3] 엑손모빌, 쉐브론, 필립스66,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등 미국 거대 석유기업들은 IRA의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탄소포집, 수소·바이오연료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에 수십~수백억 달러 투자를 이미 결정함. 다만,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중소업체들은 IRA 폐기에 찬성

[4] 미국의 관세법 338조는 미국의 상업에 대해 차별·부당 대우하는 국가를 상대로 신규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을 인정하였으며, 무역법 301조 또한 해외 정부의 미국 이익 침해 또는 미국의 상업활동에 부당한 제재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상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규정함

2.『실리주의자』트럼프 재선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 **트럼프 1기부터 트럼프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주장을 번복하거나 충동적인 행보를 보여 일각에서는 그를 "명백하게 예측불가한 인물**(Predictably unpredictable)**"이라고 평가**[5]

- 2018년 트럼프 1기 재임 당시 기존의 반(反)NATO 입장을 뒤집고 NATO의 필요성을 선언하는가 하면,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공격을 두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리아에 곧 미국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라고 맞대응하는 등 돌연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그는 암호화폐를 사기(Scam)로 규정했으나 암호화폐 업계가 2024 미 대선 캠페인에서 그의 진영을 후원하자 대통령 당선 시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량 비축하여 친(親)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임을 공약
- 그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틱톡 금지를 주장했으나 이후 틱톡을 칭찬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다소 비일관적인 행보를 보임
- 한편 2024 미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는 줄곧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요 사안에서 러시아와의 대립을 피해왔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매우 좋아한다. 그는 내 임기 때 매우 좋은 친구였다"고 언급하는 등 적성국가에 대한 입장이 급변한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 입장 변화 사례]

주제	변경 전 입장		변경 후 입장
북대서양조약기구 (이하 "NATO")	▪ 2023.11월 미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NATO 회원국들이 GDP 2% 방위비 지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 **조약의 핵심 사항인 '집단 방위'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러시아가 동맹국들을 침공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발언	▶	▪ 2024.10월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은 "**우리는 나토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이며 "트럼프는 나토가 강해지길 원한다. 그는 우리가 나토에 남길 바란다"고 밝힘
암호화폐	▪ 2021년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다", "그저 사기 같다"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밝힘 ▪ 암호화폐는 "재앙"이며 **비트코인은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발언	▶	▪ 2024.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親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

[5] Predictably unpredictable Trump's personality and approach towards China (The University of Edinburgh, 2021.01.06)

주제	변경 전 입장		변경 후 입장
			▪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
틱톡(TikTok)	▪ 2020.7월 "**틱톡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에서 사용을 막을 것**"이라며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발언	▶	▪ 2024.3월 하원이 발의한 **'틱톡 금지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침 ▪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틱톡이 퇴출당하면 국민의 적인 페이스북과 다른 미디어 회사들이 더 거대해질 것" 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
이민정책	▪ 2017.1월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 그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간 중단**하고 난민수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	▪ 2024.6월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자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우편투표	▪ 2020년 미 대선에서 사전투표, 특히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비난하며 대선 당일 투표소 투표를 권장 ▪ 2024년 초 미시간주 유세에서는 "(우편 투표는) 완전히 부패했다"고 말하고, 2024.3월 "**(우편 투표는 필연적으로) 부정행위로 이어진다**"고 주장	▶	▪ 2024.10월 "**나도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빠른 투표를 독려 ▪ 2024.9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중 **사전투표를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한편 "즉시 시작하라"고도 말함** ▪ 트럼프의 입장 변화는 사전투표 참가자가 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총기규제	▪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시스템을 강화하고, **총기 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하고, 범프스탁[6]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밝힘	▶	▪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의 총기규제안을 반대함에 따라 **규제 완화로 다시 입장 변경** ▪ 2024.5월 전미총기협회(NRA) 연례 회의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며 "총기 소유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6] 총기의 반동을 이용해서 방아쇠를 반복적으로 당기는 것 같은 효과(연사)를 내주는 기구

주제	변경 전 입장		변경 후 입장
러시아	▪ 2014.3월 "그(밋 롬니)는 러시아가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특정 언론을 포함해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가 전적으로 옳았음이 드러났다. **러시아가 이란과 무엇을 하고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라**"고 발언	▶	▪ 2024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요 사안에서 러시아와의 대립을 거부
시리아	▪ 2019.9월 "우리는 이슬람국가를 무찔렀다", "우리의 젊은 남녀들이 지금 모두 돌아오고 있다"며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의 완전한 철군** 계획을 밝힘	▶	▪ 2018년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을 두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리아에 곧 미국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라고 맞대응
중국	▪ 2018.9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더 이상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고 발언 ▪ 2016.5월 선거유세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비교해 높은 중국의 수출 규모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강간(rape)해온 중국**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발언	▶	▪ 2024년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매우 좋아한다. 그는 내 임기 때 매우 좋은 친구였다**"고 언급

※ 출처: 언론보도 종합

○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무쌍한 태세는 미국에 최대의 실익을 가져다 준다면 이에 맞게 입장을 바꾸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의 상거래적(Transactional) 관점에서 비롯됨**

- 그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및 방산 공급이 미국에 손해라고 보고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동결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
-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트럼프 2기에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해 상황에 따라 그의 공식 입장과 정책의 향방이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분석 및 시사점

○ **공화당의 상원 장악으로 입법·행정권을 장악한 트럼프는 향후 본인의 정책 추진에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의결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6년 상원 중간선거 이전까지 법인세 인하, 오바마케어 폐지, 중국 봉쇄 등 상·하원을 활용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선거 캠페인 초기부터 반대입장을 표명한 IRA는 비교적 長考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트럼프의 예측 불가하고 모호한 행보는 그의 상거래적 마인드, 즉 정책을 거래(deal)로 간주하고 유불리를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특히 외교·통상 분야에서는 성동격서(聲東擊西)식으로 상대방을 흔드는 기술을 주로 사용하여 거래 대상의 반응을 먼저 시험해보는데, 이 때문에 향후 트럼프의 외교·통상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 뿐만 아니라 상대방(상대국)의 반응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선거 캠페인 기간 중 공약한 관련 정책이 그의 임기 중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Ⅰ. 대(對)중 봉쇄를 통한 패권경쟁 우위 선점 전략

1. 제47대 美 대통령의 Decoupling 전략

"A reformed FBI and Justice Department will be hunting down Chinese spies" (...)
"impose whatever visa sanctions and travel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shut off Chinese access to American secrets" – Donald Trump

○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Decoupling 전략을 내세워 제45대 대통령 재임 당시 추진한 강경한 정책 기조 유지**

- 트럼프는 미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과 ▲경제 관계 단절 ▲고율 관세 부과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안보 우선시 ▲공급망의 탈(脫)중국화 ▲기술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줄곧 내비쳐 당선 시 미-중 대결구도가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 2018년 트럼프 1기에는 광범위한 품목의 중국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7]하여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개시한 바 있으며,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2%까지 상승한 선례 있음
-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천여 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 미국 내 중국 언론인들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중국인들을 상대로 비자 제한 조처를 여러 차례 단행
- 이처럼 트럼프가 줄곧 유지해온 미-중 Decoupling(디커플링) 정책 기조가 이번 취임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관측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여 우리 산업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7]Tariff Tracker: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Trump-Biden Tariffs (Tax Foundation, 2024.6.26)

2. 제45대 美 대통령 재임 당시 트럼프의 정책 기조

① 통상

○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시행한 통상 정책은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강했으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조치가 두드러짐**

-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고립주의 노선 하에서 더 강경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정책 및 무역협정을 활용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신규 법령 제정, 별도의 행정명령 발동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할 것임

[제45대 대통령 재임 당시 트럼프의 통상 조치]

유형	정책·기구명	대상 품목	주요 내용
법령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신흥 및 기반기술	▪ 중국과 비우호국의 미국 신흥 및 기반기술(EFT) 획득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 ECRA를 통과 ▪ 동 법에 의거하여 EFT 품목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심의 대상을 확대, 통제 절차 강화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FIRRMA)	핵심 기술 및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를 위해 2018년 제정 ▪ 동 법은 통제권 획득으로 귀결되는 지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산업 전반 *기업 224곳이 동 법안을 적용받음	▪ 미국 감사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일부 중국기업이 미국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태양광 셀/모듈, 가전제품	▪ 1974년 무역법 201조에 의거하여 태양광 셀/모듈과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 한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도 해당 세이프가드를 적용받음
	Section 232 of the Trade Act of 1962	철강 및 알루미늄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각각

유형	정책·기구명	대상 품목	주요 내용
			25%, 10%의 관세 부과 ▪ 한국산 철강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해당 관세 적용 대상
	China Section 301	수입품 전반	▪ 1974년 무역법을 근거로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무역 협정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자동차/자동차 부품, 섬유 및 의류, 농산물, 디지털 제품, 철강 및 알루미늄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하여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
	Phase One Trade Agreement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금융 서비스, 지식재산권, 환율	▪ 2020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여 무역 갈등을 일시적으로 완화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	산업 전반	▪ 미국 우선주의, 양자 무역협상을 선호하는 기조에 따라 취임 직후 TPP에서 탈퇴
행정 명령	Executive Order 13959[8]	산업 전반	▪ FY99 NDAA[9]의 제1237조를 근거로 2020년 11월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공산주의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표
	Executive Order 13936[10]	-	▪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인 2020.7월 동 행정명령을 내려 해외 자본과 중국 본토 기업간의 연결통로인 홍콩의 특별 지위 철회
	Buy American, Hire American	산업 전반	▪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 발표
기타 조치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방산, 항공우주, 첨단 기술,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	▪ 2019년 5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EAR의 Entity List에 추가 ▪ 2020년 5월, EAR §736.2(b)(3)의 "General Prohibition Three"에 (vi)항을 신규 추가하여 규제 강화

[8] 「Addressing the Threat From Securities Investments That Finance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는 미국 국방 예산 설정을 위한 예산안의 수준과 구체적인 항목을 제안하는 정책 법률로 매년 회계연도별로 입안됨

[10] 공식 명칭: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

유형	정책·기구명	대상 품목	주요 내용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개혁 요구	산업 전반	▪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규제 요구, 개발도상국 지위 남용에 대한 개선 요구 등 WTO의 개혁을 요구 ▪ 항소기구 위원 선임을 봉쇄

※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등 각종 연구기관 보고서 및 기사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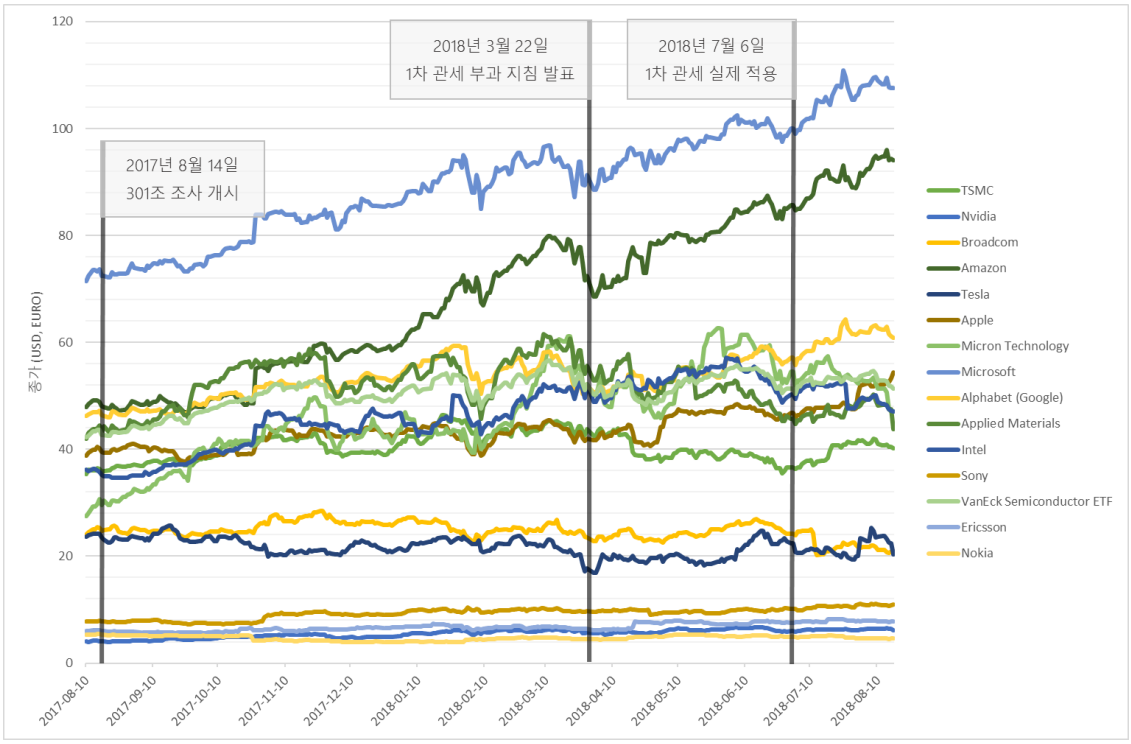
○ **특히 China Section 301은 관련 중국 기업 주가에 하방압력을 가하고 이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도 소폭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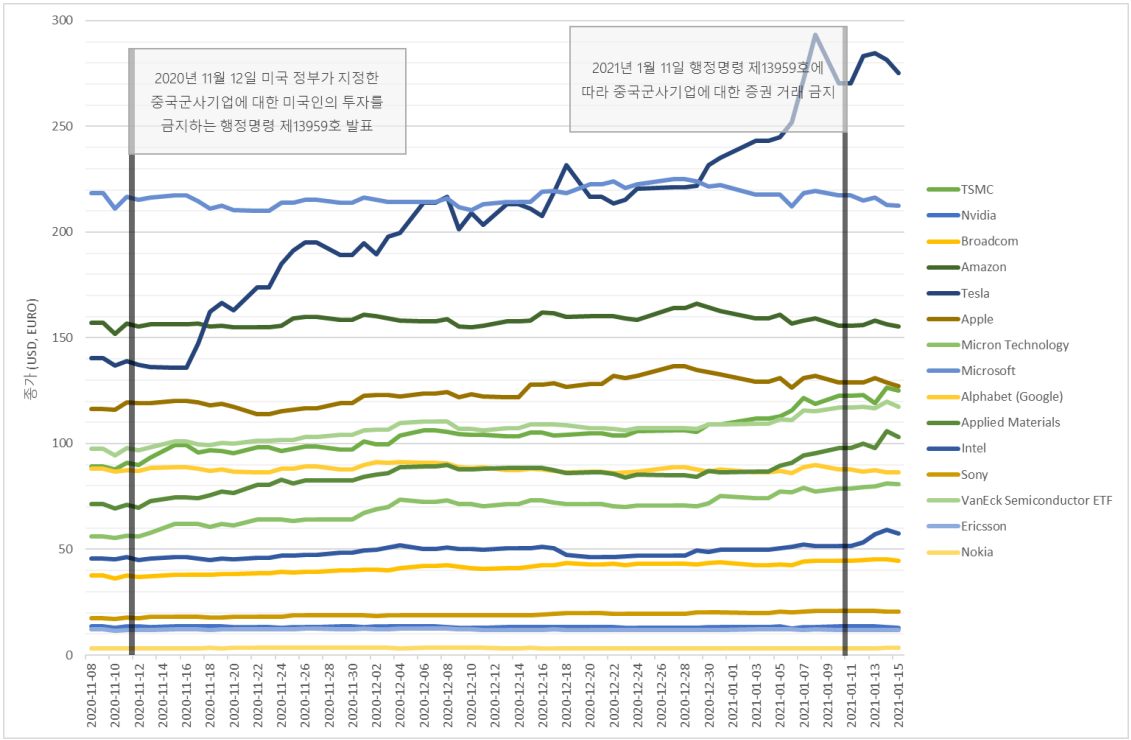
-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당시 섹션 301 중국 관세와 수출통제개혁법(이하 "ECRA")을 발표함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 및 거래 기업의 주가 추이를 보면 미국 기업들은 규제에 크게 반응하지 않은 한편 중국과 한국 기업은 섹션 301 중국 관세 발표 전후 하락세를 보임

- 중국 기업 CATL, Hikvision, Dahua는 등락을 이어오다 섹션 301 중국 관세에 대한 1차 지침이 발표된 날(2018.03.22) 평균 1.65% 하락하고 익일 3.12%(▼1.47%p) 감소율을 보임. 또한 섹션 301 중국 관세가 실제 적용 되기 6일 전부터 적용시점(2018.07.06)까지 주가가 평균 0.91%에서 4.60% 연달아 감소. ECRA 발효일(2021.01.11) 전후로는 주가가 0.38~3.33% 하락

-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기업에 비해 규제의 영향이 가시적이지는 않았으나, 섹션 301 중국 관세 1차 지침이 발표되기 전날 0.81%, 발표 다음날 5.09%까지 하락. ECRA 발효일 전후로 주가가 0.57~2.10% 감소하고, 투자 정리기한(2021.11.11)에는 0.67%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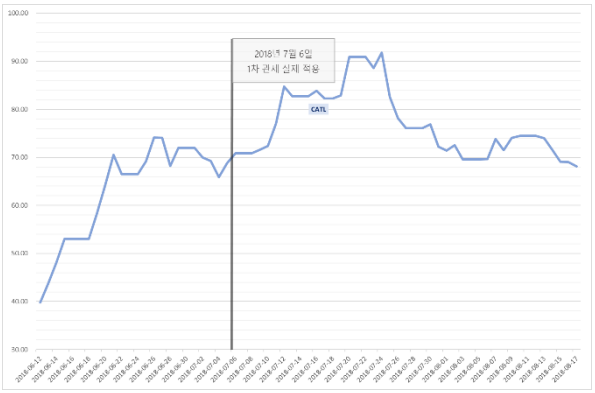
[트럼프의 통상 정책 발표 당시 관련 미국 및 유럽 기업 주가 추이]





[트럼프의 통상 정책 발표 당시 관련 중국 기업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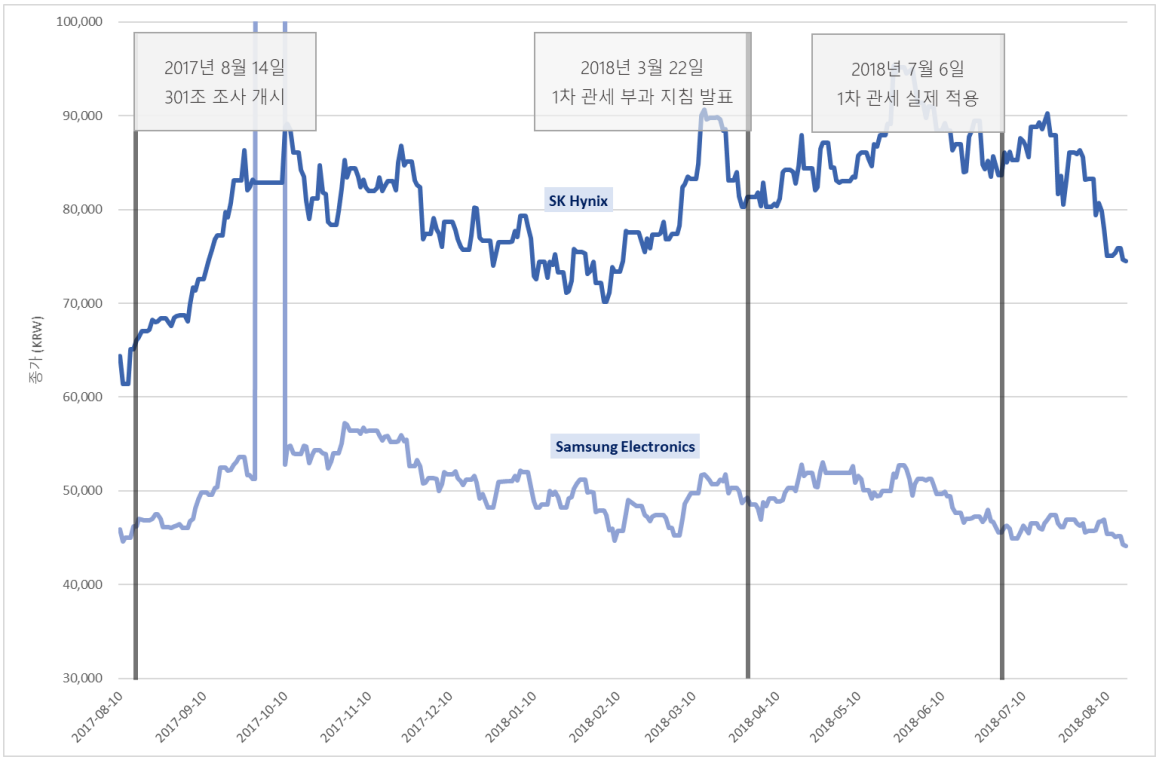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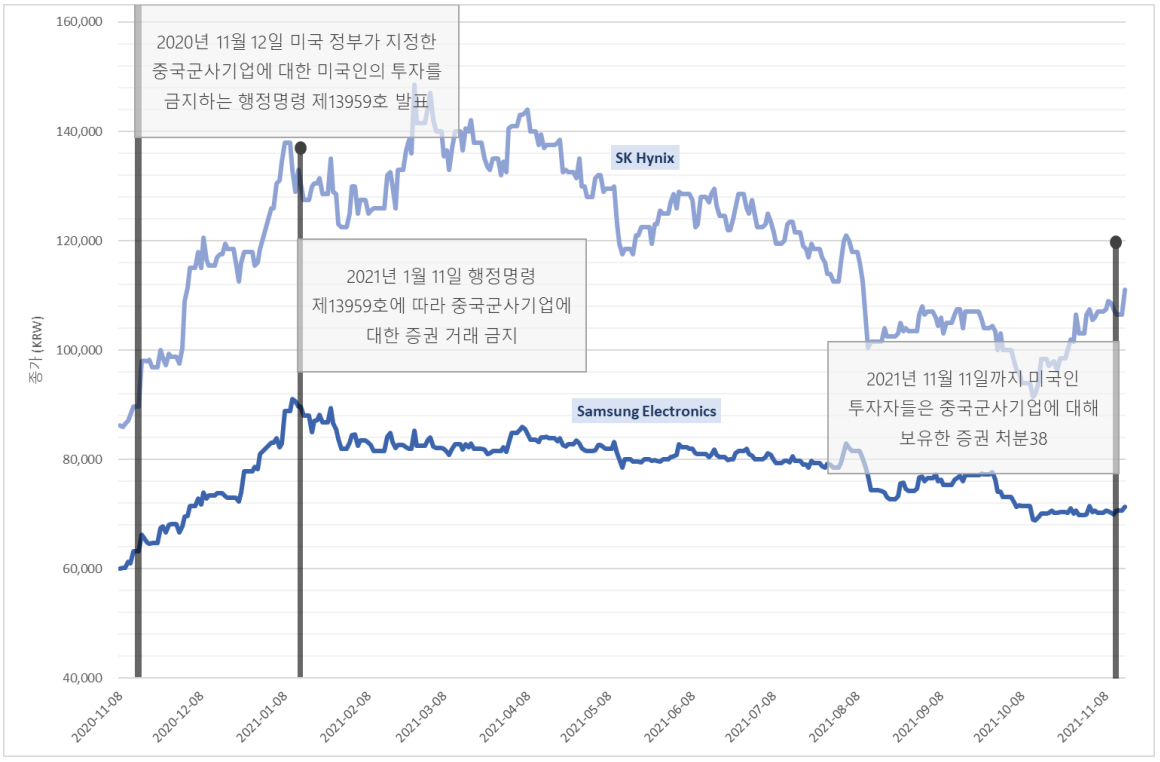






[트럼프의 통상 정책 발표 당시 관련 한국 기업 주가 추이]





② 안보

○ **트럼프는 중국을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 목록인 Entity List와 SDN에 추가하고 중국産 제품 사용 및 거래 금지를 공식화**

- 당시 미국은 중국의 신흥 및 기반기술과 방산·항공우주·IT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국(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11]에 중국 기업을 다수 등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추가 등재를 하여 2024.07.01일 기준 중국 기업 총 427곳이 SDN으로 지정됨
- 또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관리하는 Entity List에 화웨이 및 화웨이 계열사 114개 사를 등재함으로써 미국 기업과의 거래 시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2019.5월 화웨이 Entity List 추가 이후 구글, 인텔, 퀄컴, ARM, 마이크론,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
- 2018.11월 미 법무부(DOJ)는 China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해 화웨이를 기소하고 중국계 연구원들을 조사하는 등 중국 산업 스파이 단속에 나선 바 있으나, 무고한 아시아계 연구원을 겨냥하여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비판을 받자 2022년 2월 공식 폐기
- 그 밖에도 Unverified List, 1260H List, Military End-User List,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List 등 다양한 제재 목록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하여 중국을 집중적으로 봉쇄하는 행보를 보임

[현재 미 정부 제재 목록 및 규제 대상 중국 기업]

목록	주요 내용	규제 대상 중국 기업
Entity List Foreign Direct Product Rule (Entity List FDPR)	▪ 관리 부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명단에 등재된 기업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정 품목과 기술의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을 위한 라이선스 요구를 받음	▪ 기업수: 715 ▪ 등재 기업: Hikvision, Huawei Technologies, SMIC, YMTC
Commerce Control List (CCL)	▪ 관리 부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일부로, 각 품목에 수출통제분류번호(ECCN)가 부여되어 수출 통제가 필요한 이중용도 품목, 기술 등을 CCL에 등재. Entity List FDPR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CCL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 차이를 보임	-

[11]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 SDN을 지정하여 이에 속한 국가 및 개인, 그리고 이 목록에 등재된 기관 및 개인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와의 미국 국적 개인의 접촉 및 거래를 금지

목록	주요 내용	규제 대상 중국 기업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 관리 부처: 미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 (OFAC) ▪ 관리 부처: 명단에 오른 개인과 법인은 미국 내 자산·재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 非미국인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	▪ 기업수: 427 ▪ 등재 기업: Poly Technologies, Wuhan Tianyu Information Industry, Xinjiang Public Security Bureau, XPCC
Unverified List (UVL)	▪ 관리 부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수출된 품목의 최종 사용자나 최종 용도의 적법성(bona fides)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당사자를 등재. 특정 기간 내에 최종 사용자 혹은 최종 용도의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Entity List로 이동	▪ 기업수: 96 ▪ 등재 기업: AECC South Industry, Changhe Aircraft Industries Group, Jiangxi Hongdu Aviation Ind. Group, Wuxi Beetech Inc
1260H List	▪ 관리 부처: 국방부(DOD) ▪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 중인 중국 군사 관련 기업들을 식별 ▪ 2024 회계연도 NDAA 제805조에 따라 2026.6.30일부터 국방부는 해당 기업과의 계약을 금지	▪ 기업수: 73 ▪ 등재 기업: Hikvision, Huawei Technologies, SMIC, YMTC
Military End-User (MEU) List	▪ 관리 부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군사 관련 최종 사용자로 의심되는 외국 기업/단체 목록	▪ 기업수: 70 ▪ 등재 기업: AECC Aviation Power, AVIC Aircraft, Hafei Aviation Industry, Harbin General Aircraft Industry
NDAA Section 1237 Chinese Military Companies (CCMC) List	▪ 관리 부처: 국방부(DOD) ▪ 1999년 NDAA의 제1237조에 의거해 국방부는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목록을 작성 ▪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인이 CCMC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는 CCMC 목록을 재무부가 관리하는 NS-CMIC 목록으로 대체	▪ 기업수: 43 ▪ 등재 기업: COMAC, CSIC, Gowin Semiconductor
Non-SDN Chinese Military Industrial Companies (NS-CMIC) List[12]	▪ 관리 부처: 미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 ▪ 등재된 기업은 '군사, 정보, 기타 보안 장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인은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 금지	▪ 기업수: 68 ▪ 등재 기업: Hikvision, Huawei Technologies, Inspur Group, SMIC

[12] 트럼프 집권 시절에는 NS-CMIC의 전신인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CCMC) 목록을 통해 관리되었으나, 2021.6월 바이든 집권 시 동 목록으로 대체

목록	주요 내용	규제 대상 중국 기업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Entity List	▪ 관리 부처: 국토안보부(DHS) ▪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과 연관된 기업들을 식별	▪ 기업수: 68 ▪ 등재 기업: Hoshine Silicon Industry (Shanshan), Ninestar Corporation, Xinjiang Daqo New Energy, XPCC
FCC Covered List	▪ 관리 부처: 연방통신위원회(FCC) ▪ 미국 내에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통신 장비 및 서비스를 등재 ▪ 해당 명단에 등재된 장비는 FCC 장비 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국 내에서의 판매·운영·마케팅 불가	▪ 기업수: 10 ▪ 등재 기업: Dahua Technology, Hikvision, Huawei Technologies, ZTE Corporation
Section 889 List (NDAA FY 2019)	▪ 관리 부처: 국방부(DOD) ▪ 섹션 889 파트 A는 연방 기관이 명단에 오른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생산한 통신 장비 또는 감시 장비를 조달하거나 얻는 것을 금지 ▪ 파트 B는 연방 기관이 이러한 장비나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 체결을 금지	▪ 기업수: 5 ▪ 등재 기업: Dahua Technology, Hikvision, Huawei Technologies, Hytera Communications Corporation, ZTE Corporation
Section 5949 List (NDAA FY 2023)	▪ 관리 부처: 국방부(DOD) ▪ 섹션 5949 파트 A는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생산한 전자 부품 또는 반도체 제품을 연방 기관이 조달하는 것을 금지 ▪ 파트 B는 해당 제품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금지 ▪ **2027.12.23일부터 시행 예정**	▪ 기업수: 3 ▪ 등재 기업: CXMT, SMIC, YMTC
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 List	▪ 관리 부처: 관리예산처(OMB), 국방부(DOD) ▪ BIOSECURE Act 초안은 연방 기관이 명단에 오른 기업에서 생산된 바이오 기술 장비·서비스 조달을 금지 ▪ 2024.9월 BIOSECURE Act는 하원을 통과했으며,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 ▪ **법안 통과 시 대부분 조항은 2032년부터 시행 예정**	▪ 기업수: 5 ▪ 등재 기업: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 출처: The Urge to Merge: Streamlining US Sanction Lists Targeting China (Rhodium Group, 2024.8.29)

○ **트럼프는 재임시절 외교정책 결정에 거래적 접근을 취한 선례가 있어 그간 미국이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대만과 필리핀에 대한 군사 지원 축소, 방위비 부담 증가 요구, 다자주의 동맹 위축 등의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 재임시절 대만 및 필리핀에 대한 대(對)중 대응방식]

대만	▪ 대만관계법에 따라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약 18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과거 행정부보다 역대 많은 판매 수치를 기록[13]하고 중국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음 ▪ 하지만 2024 미 대선 캠페인 당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대만이) 가져갔다"며 대만의 방위비 부담을 주장해 인터뷰 공개 이후 TSMC 주식예탁증서(ADR) 주가 뉴욕증시에서 정규 거래시간 전 프리마켓이 열리자마자 4% 가까이 하락하고 TSMC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은 날 코스피 시장에서 5.36% 하락[14] ▪ 이에 조중타이 대만 총통은 국방비 예산 확대, 1년 병역의무 연장 등 자국 군사 자립화를 위한 대응을 하는 한편, 전세계 파운드리 1위 제조업체인 TSMC의 자국 중심 연구개발(R&D)과 해외 반도체 업계의 대만 시장 진출을 촉구
필리핀 (남중국해)	▪ 트럼프 재임시절에도 미국은 필리핀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군용기·군함·항공모함을 파견한 바 있으나,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하는 행보도 보여 필리핀 언론에서는 향후 미국 남중국해에서의 개입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15]

※ 출처: 언론 보도 종합

[13] Trump administration approves arms sale to Taiwan amid China tensions (CNN, 2020.5.21)

[14] 트럼프 "대만, 美반도체 100% 가져가…방위비 내라" 벌써 청구서(중앙일보, 2024.7.17)

[15] US presidential elections: Implications for Manila-Washington alliance, South China Sea (Benar News, 2024.10.3)

3. 트럼프 재선 후 관전 포인트 5가지

① 중국 플러스 원으로 부상할 지역

○ **미-중 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은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을 대응책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대체지로 ▲중남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부상을 기대**

- 트럼프는 재선 시 미국 주도의 공급망 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폐기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리스크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 그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은 멕시코 및 중미 지역을 북미 제조공장 및 원자재 공급선 대체지로 주목하고 있고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는 배터리 핵심 광물 매장·생산량이 풍부하여 전기차·배터리 산업 공급망 유망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한편 산업계는 2022년 말부터 세계 반도체 생산장비 공급의 35%에 해당하는 미국의 AMAT, 램리서치, KLA 등이 중국사업부 내의 중국 외 국적 직원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이동시키며 동남아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동남아시아를 주시

○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는 정·제련 인프라 확대를 통한 다운스트림 분야와 친환경 분야 육성을 도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시장진출 환경이 용이해지는 추세**

- 브라질과 칠레 광업은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으나, 아르헨티나는 주정부가 광물을 소유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광업 관련 역할이 분리되어 있음

[남미 3개국 탐사·채광 관련 주요 법규 및 허용 주체]

국가	소유	주요 법규	민간	탐사·채광 가능 주체
브라질	연방정부	Mining Code 1967 Decree Law No.267/67	탐사권, 채광권	a. 브라질 국적의 자연인 b. 브라질에 본점이나 영업소를 가진 법인 c. 기타 연방정부의 인허가가 부여된 주체
칠레	정부	Mining Code 1932 Mining Code 1983	탐사권, 채광권	a. 정부 및 b. 정부 소유 기업 c. 행정적 양허 주체 d. 특별 리튬 운영 계약(CEOL) 체결 주체

국가	소유	주요 법규	민간	탐사·채광 가능 주체
아르헨티나	주정부	Mining Code Law No. 24585 Mining Investment Law No. 24196	탐사권, 채광권	a. 개인과 법인 (외국인 투자 규제 없음)

※ 출처: 남미 배터리 광물 개발 환경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4.07.29)

- 브라질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설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 규제도 시행. 브라질 정부는 태양광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ICMS) 면제, 브라질개발은행(BNDES)을 통한 자금 지원 등 다방면으로 태양광 산업을 지원
- 또한 브라질 정부는 배터리 광물업계가 더 친환경적인 추출 방식을 채택하도록 전기차·배터리 산업 친환경 정책인 MOVER 프로그램(Programa Mobilidade Verde e Inovação) 발표

[그린 모빌리티 산업 육성 주요 방향]

주제	내용
친환경 규제	▪ 차량 생산 및 수입 관련 친환경 목표 달성 의무 부여
패널티 부과	▪ 자동차 생산 시 친환경 기준을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벌금 부과
인센티브 제공	▪ 연구 기술·생산 시설 투자 등 업체에 대해 별도의 금융혜택 제공
세제 혜택	▪ 친환경 의무충족 자동차와 미충족 자동차 간 세율에 차이를 둠
국가산업기술개발펀드 설치	▪ MOVER 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한 산업·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

※ 출처: 남미 배터리 광물 개발 환경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4.07.29)

- 현재 남미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자동차가 있음

[남미 진출 한국 기업 사례]

기업명	산업	투자 국가	세부 방식
포스코홀딩스	광물	아르헨티나	▪ 염호 인수, 현지 리튬 공장 설립
현대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린수소차	브라질	▪ MOVER 프로그램 하 투자 계획 발표

※ 출처: 남미 배터리 광물 개발 환경 및 시사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4.07.29)

○ **한편, 2026년 USMCA[16] 재검토 기한 도래와 공화당 집권이 맞물리면서 해당 협정의 세부 조항 변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멕시코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여지 있음**

- USMCA 폐지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대세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축소 및 폐지할 가능성이 있어 관세 혜택과 IRA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기대하고 멕시코로 제조 기지를 이전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영향을 받을 전망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꼽히고 있어 미-중 갈등의 수혜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중국의 우회수출 경로로 간주되어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동남아시아 국가별 시장 현황]

베트남	▪ 인건비가 낮고 시장 잠재력이 높아 삼성전자, 애플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음 ▪ 비교적 낮은 세율과 온건한 규제 등 베트남 정부의 친 기업적인 경제정책 또한 글로벌 기업들을 베트남으로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
말레이시아	▪ 인텔, 글로벌파운드리스, 인피니언 등 반도체 회사들이 사업체 설립이나 확장 추진 ▪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양광이나 전기차 부품 같은 다른 부문 투자도 나타나는 추세
인도네시아	▪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구리, 니켈, 코발트 등 자원 보유국으로 현지 정부가 중국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
싱가포르	▪ 금융 및 규제와 관련한 신뢰로 많은 기업이 지역 본사를 설립

※ 출처: 동남아, 탈중국 생산 다각화 기업들에 최적지로 부상(한국무역협회, 2024.06.25)

16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베트남 투자 인센티브(법인세 혜택)]

적용 대상	법인세 우대		법인세 면제	
	우대 세율	적용기간	완전 면세	완전 면세 후 감세
▪ 해당 지역 내 투자 - 사회·경제 특별 낙후지역 - 경제특구/하이테크단지 ▪ 해당 산업에 투자 - 하이테크 산업, 환경보호, 인프라 개발	10%	15년	4년	9년 간 50%
▪ 사회화 사업 - 교육, 의료, 문화, 환경, 스포츠 등	10%	무기한	4년	9년 간 50%
- 낙후지역 이외의 지역에의 임업/축산업/농수산물 가공업	15%	무기한	-	-
- 사회·경제 낙후지역	17%	10년	2년	4년 간 50%

※ 출처: 공급망 다변화의 수혜주 베트남 기회와 리스크는(KITA 통상리포트, 2021.05.14)

※ 법인세 우대 기간은 매출 계상 연도부터 기산되며, 면세 적용 기간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기산

– 한편 중국이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베트남을 경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베트남이 우회조사의 주 타겟이 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대체 수입처가 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대(對)베트남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등 베트남에 내재된 시장 리스크 존재

②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 영향 인물(예상)

○ **美 뉴스 간행물 Foreign Policy는 트럼프의 재선 시 외교 정책 및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참모 11인을 선정**

- 소개된 인사 11인은 대부분 매파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해왔으며 특히 중국을 미국의 주요 적으로 간주하여 강경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시각 보유

[트럼프의 대(對)중 외교 정책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계 인물 11인]

성명	직책 / 역할	입장
Elbridge Colby	▪ Marathon Initiative 공동 창립자 ▪ 전 국방부 차관보 The Strategy of Denial 저자	▪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거부방어 전략 옹호 ▪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과의 갈등 대비의 필요성 강조
Fred Fleitz	▪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부의장 ▪ 존 볼턴 전 비서실장 ▪ 장기 국가안보 전문가	▪ 매파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 문제에 중점을 둠 ▪ 특히 정보에 있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 강조
Richard Grenell	▪ 전 국가정보국장 대행 ▪ 주독일 미국 대사로 재직 ▪ 트럼프의 국가정보국 대행	▪ 친(親)이스라엘, 반(反)이란 성향 ▪ 미국의 중국 의존도 감소의 필요성 강조, 유럽 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보유
Keith Kellogg	▪ 예비역 중장, 전 국가안보보좌관 ▪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전직 국가안보보좌관	▪ 군사력 및 국제사회의 억제(global deterrence) 강조 ▪ 중국을 미국의 주요 적으로 간주하여 대중 강경 노선을 옹호
Robert Lighthizer	▪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중국에 대한 관세 등 트럼프의 대중 통상 정책 수립 ▪ NAFTA 및 그 밖의 무역 거래의 재협상에서의 핵심 인물	▪ 중국에 대한 관세 및 강경 무역 정책의 강력한 지지자 ▪ 중국을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제적 위협으로 간주
Johnny McEntee	▪ 전 대통령 인사 담당 국장 ▪ 트럼프 행정부 말기 참모진 구성의 핵심 인물	▪ 중국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인사들을 지지
Christopher Miller	▪ 전 국방부 장관 대행 ▪ 2020년 대선 이후 국방부 주도 ▪ 국가 대테러 센터 책임자 역임	▪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 축소 옹호 ▪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 보유

성명	직책 / 역할	입장
Stephen Miller	▪ 트럼프 행정부수석 정책 고문 ▪ 트럼프 이민 정책의 설계자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주요 영향력 행사	▪ 반세계주의, 강한 민족주의적 시각 보유 ▪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에 비판적이며, 리쇼어링을 통한 미국 일자리 창출을 지지
Robert O'Brien	▪ 전 국가안보보좌관 ▪ 2019~2021년 국가안보보좌관 역임	▪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음 ▪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인도 태평양 전략 지지
Kash Patel	▪ 전 국방부 참모총장 ▪ 대테러 및 정보 정책의 핵심 인물	▪ 외국의 개입을 줄이되 중국과 같은 적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Mike Pompeo	▪ 전 국무부 장관, CIA 국장 ▪ 대(對)이란 최대 압박 캠페인의 설계자 ▪ 미중 긴장 관계의 핵심 협상가	▪ 중국에 대해 극도로 매파적이며, 경제 디커플링 주장 ▪ 중국을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

※ 출처: Trump's Foreign-Policy Influencers (Foreign Policy, 2024.08.26)

③ 중국 직구 플랫폼 규제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관세를 피하며 미국 시장에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 직구 플랫폼을 두고 규제법을 발의할 가능성 높음**

- 쉬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 패키지에 대한 관세 면제라는 미국 무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관세를 피하고 미국 판매가의 절반 혹은 3분의 1에 불과한 초저가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는 실정
- 트럼프 1기 재임시절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비롯하여 알리바바의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 텐센트 QQ, 쉐어잇, V메이트, WPS 오피스 등 중국 모바일앱 일부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선례 있음
- 미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가 틱톡을 지지한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 틱톡 금지법안[17]이 미국 의회를 초당적으로 통과했다는 점과 중국 직구 플랫폼이 공격적인 시장 확대 행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 기업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음

[17]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2025.01.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금지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법

④ 중국의 규제 우회 전방위 차단

○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수출통제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기업이 전기차나 부품을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 USMCA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국 전기차가 멕시코를 우회해 관세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한편 중국 회사의 사업체가 반도체를 수입해 이를 중국에 반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든 전 행정부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 등 중국의 제재 우회 루트로 사용될 수 있는 국가들 대상으로 '거부 추정 원칙[18]'을 통해 수출 통제를 하는 한편, 중국으로 기술이 이전될 위험이 있는 40개국 이상에도 수출 허가를 별도로 받을 것을 의무화
- 이처럼 미국의 첨단·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IRA를 폐지 내지 축소하고, 수출국이 아닌 기업(Entity)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등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18]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정책

⑤ 미국 대(對)중 봉쇄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의 관세 전쟁처럼 트럼프 2기에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 시 중국도 보복 관세를 잇따라 부과하여 제2의 미-중 관세 전쟁 재발 가능성 존재**

[트럼프 1기 집권부터 현재까지 미-중 관세 추이]

※ 붉은박스 표시된 내용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 해당

시기	미국	중국
2018.7	340억 달러 규모 중국산 818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340억 달러 규모 미국산 545개 품목에 25% 보복 관세
2018.9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5,000개 이상의 품목에 5-10% 보복 관세
2019.5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관세 10%에서 25%로 인상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관세 최대 25%로 인상
2019.12	1단계 무역합의 발표 (일부 관세 인하 및 추가 관세 보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약속
2020.1	1단계 무역합의(US-China Phase One Trade Agreement) 서명	
2021.1	바이든 행정부 출범, 기존 관세 유지	기존 관세 유지
2022	일부 중국산 제품 관세 면제 연장	미국산 의료용품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연장
2023	기존 관세 대부분 유지, 일부 품목 관세 면제 검토	기존 관세 유지
2024 (전망)	트럼프 재선 시 최대 60% 관세 부과 검토	미정

※ 출처: 미중 무역전쟁 포문 연 '트럼프 1기'...관세서 기술까지 전방위 갈등(서울경제, 2024.07.17)

○ **트럼프의 고립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NATO, IPEF 등 다자주의 체제가 위축되면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19]된 가운데, 중국은 RCEP 활성화를 통해 다자주의 주도국을 자처하고 강경한 대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중국의 대응 사례]

분류	중국 대응 사례		전망
통상 조치	▪ 보복 관세 부과 ▪ 수입 제한조치 - 국유기업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요구 통해 대두 등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 - 대미 비관세 장벽 강화 *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판매 제한 조치, 미국산 과일이나 자동차의 통관 대기 시간 연기, 중국인의 미국행 관광 제한	▶	▪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 시 보복 관세 부과 및 대미 비관세 장벽 강화 ▪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인 갈륨, 게르마늄 등 첨단 기술 재료 대한 수출통제 강화
대미 정책	▪ 퀄컴(Qualcomm)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실시 등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조치 시행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도입(2019) ▪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조정하여 수출 제한 항목에 첨단기술 항목 23개 추가(2020) ▪ 「외국인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제정(2019) ▪ 「중국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제정(2020)	▶	▪ 미국 반도체 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금지 조치 지속 ▪ 전략광물 안보 시스템 및 수출통제 제도 개선 ▪ 외국의 제재·간섭·확대관할권에 대한 대응 강화 ▪ 2024.4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 강령성 문건인 「국9조」에 따라 자본시장 역시 개방보다는 관리감독 강화, 리스크 방지, 고품질 발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기관과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전망 ▪ 「결정」에 언급된 「금융법」 제정도 관리감독 강화와 금융 리스크 방지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음

[19] How China would tackle a second Trump term (Brookings, 2024.05.31)

분류	중국 대응 사례		전망
산업 정책	▪ '중국제조 2025' 정책 지속 추진 ▪ 기술 자립도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신형 인프라 투자에 1조 4천억 달러 투자 계획 ▪ 2020년 반도체 산업에 1,440억 위안(24조 원)을 조달. 이는 2019년 연간 총 투자액(640억 위안)의 2.2배 수준[20] ▪ 중국의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14차 5개년 개발계획(2021~2025)과 2035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미국이 제재하는 첨단기술의 독자적 확보를 핵심 목표로 제시	▶	▪ 외자기업에 대해 중국 증시 상장, 정부조달 시장 참여, 토지사용 혜택 등 투자지원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고립 탈피 노력
다자협력	▪ RCEP를 통해 협력국과의 경제 협력 도모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지속 추진	▶	▪ RCEP를 통한 국제 파트너십 도모 노력
환율 정책	▪ 위안화 가치 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유지 *2019.8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돌파	▶	-
법적 대응	▪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대중 관세 조치에 대한 제소 ▪ 미국이 거래국 대상으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자 화웨이는 제소로 대응	▶	▪ WTO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불공정 무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 ▪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문제를 겨냥하는 미국, EU정책에 맞서 강제노동 관련 기업 실사행위를 「반간첩법」에 의거 '간첩행위'로 간주 ▪ 미국 정부 상대로 중국 대형기업들의 소송 가능성 있음 ▪ 외국 기업 상대로 라이선스 소송 제기
군사적 대응	▪ 민군융합(Military Civil Fusion, MCF)을 통해 AI·우주·사이버·무인기 향상에 집중 ▪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 및 군사 시설 확충 ▪ 정찰감시·위성통신·위성항법·기상학육성에 투자하여 미국의 우주군 창설에 대응	▶	▪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 및 도입 확대 통해 군사 현대화 가속화 ▪ 남중국해에 군사 시설 확충 및 군사 활동 지속 ▪ 민군융합(Military Civil Fusion, MCF) 강화 ▪ 항공·우주 기술 육성 위한 투자

[20] 미국의 기술 탈동조화 전략과 중국의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12)

분류	중국 대응 사례	전망
	▪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 건조 가속화 ▪ 러시아 등과의 합동 군사훈련 확대	
대만	▪ 보잉(Boeing)의 방위 사업부,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등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미 방산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2020)	▪ Sierra Nevada Corporation, Stick Rudder Enterprises LLC, Cubic Corporation, S3 AeroDefense, Teko TCOM 등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미 방산 기업 9곳에 대한 제재 (2024.09) 시행

※ 출처: 각종 논문 및 기사 종합

▶ 분석 및 시사점

○ **트럼프 1기 재임시절에 추진한 미-중 디커플링 조치가 2기 재선 이후에도 지속 및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우리 기업은 ▲미 관세·무역협정 ▲규제 대상인 중국 협력사 ▲중국 대체지의 정책환경 ▲중국의 대미 제재를 예의주시하여 대비해야겠습니다.**

- **(① 美 관세·무역협정)** 중국산 원자재·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IRA 축소 등 법적 환경 변화는 미국 및 중국 내 생산 기지를 가진 한국 기업들의 원가·수출·주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므로 모니터링하여 기업 전략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② 규제 대상인 중국 협력사)** 미 정부 제재 목록이 다수 존재하고 목록별로 규제 대상 중국 기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바, 우리 기업이 거래하는 중국 협력사의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직 시행되지 않은 Section 5949 List와 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 List 경과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 **(③ 중국 대체지의 정책환경)** 중남미, 동남아 등 중국 대체지의 법규, 산업 지원책, 기회 및 리스크 요소를 면밀하게 살펴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④ 중국의 대미 제재)** 첨단 기술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 우리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규제를 파악해 대응이 필요합니다.

Ⅱ. 美 통상 압력, 예의주시 필요한 보호무역 조치

1.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와 관세장벽 강화

○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보다 더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이를 동맹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적 통상 기조는 사실상 트럼프 1기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보호무역·자국우선주의는 그간 미국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트럼프 2기 정부 또한 경선과정에서부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적용하고, 상호무역법을 통해 해외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 제품에 상호 관세[21]를 부과하겠다고 예고
- 특히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가를 불문하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의 보편관세 정책은 FTA 위반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트럼프는 FTA 재협상 또는 무시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의 보편관세는 미국의 낮은 관세율이(평균 3.3%) 미국산 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와 같은 내수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팬데믹 이후 일자리를 잃은 미국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재임 시절에도 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한 바 있어 정책 추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우방국에서 트럼프의 보편관세는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데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우방국간 무역갈등이 예상됨
- 트럼프는 지난 1기 때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USMCA를 출범시켜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관세를 강화한 바 있으며, FTA와 미국 우선주의 충돌 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편관세 적용 의지를 분명히 함

[21]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해당 국가가 미국제품에 부과한 관세율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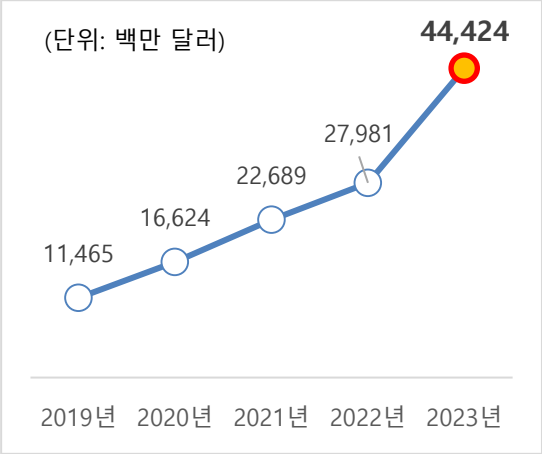
○ **관세와 re-shoring 정책,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미국 영토 내로 제조업 공장과 일자리 이전 유도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외국 주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오기(take)위해 법인세율 인하(21%→15%)를 공약으로 발표하며 한국을 중국, 독일과 함께 대상 국가로 거론
- 트럼프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 나라들은 매우 많은 관세를 물 것이라고 밝히며,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고율관세를 채찍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 통상 각국 정부가 '투자 유치'라는 표현으로 자국내 글로벌 기업유치를 우회적으로 사용한 반면, 트럼프는 '빼앗겠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take'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트럼프의 re-shoring 정책이 강제성을 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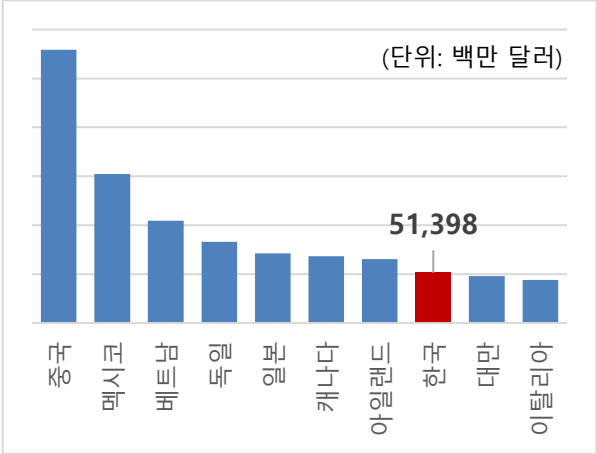
○ **한국은 對美 무역수지 주요 흑자국가로 미국의 관세 인상, FTA 수정 또는 재협상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2023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하며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가 8위에 오름

[최근 5년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추이]



[2023년 주요국 대상 미국의 무역 적자]



※ 출처: 한국무역협회

- 팬데믹 이후 유가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의 물가 상승 영향으로 對美 수입은 감소한 반면, 팬데믹 이후 미국내 유동성이 풀리며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對美 수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해석됨
- 트럼프는 최근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는 등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셰일가스 구매 확대 등을 통해 대미 수입을 확대하여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등 창의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분석 및 시사점

○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실질적인 중국 봉쇄 ▲미국내 일자리 확대 ▲무역수지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바이든 정부는 우방국간의 협력을 통해 산업 밸류체인상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de-risking 전략을 추진한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매우 높은 관세와, 중국 제품이 우호국을 통해 우회하여 미국으로 저렴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de-coupling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對중국 규제로 중국 또한 이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은 해당 품목의 대체재 개발, 수급 다각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또한 트럼프는 미국내 일자리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센티브를 통한 re-shoring,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관세율 상향, FTA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관련 기업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 **트럼프는 통상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의 FTA와 충돌 시 FTA 조항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트럼프 1기 정부의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었던 피터 나바로가 한미 FTA 탈퇴를 권유한 사실이 허버트 맥매스터 前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한미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부유한 한국에 미국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나라에 관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FTA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상호관세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무역 갈등이 예상됩니다.
- 이에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 변화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양국간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 우리나라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창의적 대책도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Ⅲ. 美 최우선 에너지 정책을 위한 화석연료 회귀

Ⅲ. 美 최우선 에너지 정책을 위한 화석연료 회귀

[Agenda47 의 에너지 관련 정책]

분류	트럼프 당선인 에너지 정책 주요 내용
저렴한 에너지	▪ 전력가격이 높으면 미국의 제조업은 전력가격이 싼 중국으로 이전할 것임 ▪ AI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저렴한 전력이 필요함 ▪ 트럼프 재임시 전력가격은 중국과 비슷했고, 일본・독일보다 저렴했으나,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민주당이 우세한 주들의 전력가격은 미국 평균보다 2배, 중국보다 3배 비쌈
에너지 안보와 주도권 확보	▪ 바이든 정권은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억제해 에너지 재앙을 만듦 ▪ 바이든은 사우디와 베네수엘라 독재자에게 석유를 간청했으며, 미국의 비상에너지 자원을 고갈시켰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Non-FTA LNG 수출을 승인했으며, LNG 수출로 미국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 이상 줄었음
석유 및 가스 산업 진흥	▪ 현재 80% 이상의 에너지는 화석연료로 조달됨. 저렴한 에너지를 위해 화석연료 채굴은 계속되어야 함 ▪ 미국 북동부 셰일가스 생산지역인 마르셀러스의 셰일가스를 수송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승인할 것임 ▪ 바이든 정부에서 석유가스업계에 부과한 과도한 세금을 줄일 것임
원자력/CCS 수소	▪ 과거 재임시 원전 발전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 ▪ 원전 연료의 해외 의존을 낮추고 미국내 조달을 늘리겠음 ▪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포집(CCS)과 수소혼소 프로젝트 대부분은 효율이 떨어지거나 실패했음.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며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재생에너지	▪ 에너지부 등의 규제, 풍력 보조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킴 ▪ 댐 건설과 수력발전을 지원할 것임

※ 출처: 신한투자증권

1. 환경규제 철폐・축소를 통한 화석연료 부활 가속화

① 기후변화 관련 협약 탈퇴 및 환경 규제 축소 예정

○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으로 지목해 옴**

-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견인해 원자재, 운송, 제조 등 전반적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고 주장
- Agenda 47[22]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시 전력 가격은 중국과 유사, 일본・독일보다 저렴했으나 현재 민주당 지역구의 전력 가격은 미국 평균 대비 2배, 중국 대비 3배 높음
- 국가간 전력가격차는 미국 제조업계 내에서 중국 등 전력 가격이 저렴한 국가로의 이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트럼프는 에너지 자급자족 통한 '에너지 독립' 강조
- ※ 2024 공화당 20대 정강 中 네 번째는 "Make America the dominant energy producer in the world, by far!" 미국을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만들자는 내용을 포함

○ **트럼프는 "화석연료 채굴"을 미국의 에너지 독립 수단으로 택하여 환경규제 축소를 통한 사업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

-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미국 내 화석연료 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증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옴
- 화석연료 공급 증가는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켜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물가 안정 및 고용 증대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
- 따라서 트럼프는 **▲저렴한 에너지원 활용 ▲인플레이션 억제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 정부의 친환경 정책 폐기 및 환경규제 축소 예정이라 밝힘

[22]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당선될 시 펼칠 정책 발표 내용

○ **트럼프는 재임 당시 약 100개의 환경규제 철회한 바 있어 두번째 임기에서도 환경규제를 철폐 및 축소하려는 양상이 반복될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 본격 시작 이후 ▲탄소배출 ▲석유시추 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2016~2020 트럼프 임기 당시 환경규제 철회 현황]

분야	완료	진행	총계
대기오염 및 배출	28	2	30
석유 시추 및 추출	12	7	19
인프라 및 도시계획	14	0	14
야생동물	15	1	16
수질 오염	8	1	9
독성물질 및 안전	9	1	10
기타	12	2	14
합	**98**	**14**	**112**

※ 출처: 뉴욕타임즈

- 트럼프는 거시적으로 ①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기존 정책 폐지 ②친환경 에너지 중시하는 환경규제 축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지원 최소화를 주장
- ①의 일환으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약[23] 재가입 결정이 화석연료 생산을 위한 투자에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므로 당선 즉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음
- ②의 일환으로 트럼프는 ▲그린뉴딜[24] 폐지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각종 친환경 규제 철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 법(IIJA) 폐지(축소)를 통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폐지(축소) 등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

[23] 미국은 위 협약 하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52%로 설정
[24]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② 화석연료 시추 증가

○ **트럼프는 "Drill, Baby, Drill"을 선거 구호로 내세우며 화석연료로의 회귀를 통해 미국을 세계 최대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

- 트럼프는 전체 에너지 공급 가운데 화석연료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흐름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입장
- 이에 따라 트럼프는 선거 구호로 석유 증산을 장려하는 의미를 담은 "Drill, Baby, Drill"을 내세우며 '美 최우선 에너지 정책(Pro-America Energy Policy)'을 표명
- 위 에너지 공약의 핵심은 '전 세계 최저가 전력 공급'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 독립을 이루는 것임

○ **화석연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해 화석연료 생산 가속화 및 화력발전 관련 기업의 수혜가 예상됨**

- 트럼프는 전세계 최대 제조 강국을 목표로 화석연료 생산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 제공 ▲절차 및 규제 완화 ▲인프라 건설 지원 등 다각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화석연료 생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화석연료 생산 촉진을 위한 트럼프 공약]

구분	주요 공약
세제 혜택	① 바이든 정부가 부과한 석유가스산업의 메탄 배출에 대한 부담금 (1톤당 $900~1,500달러) 폐기
	②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세액 공제 지원
절차 및 규제 완화	③ 자국 내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간소화
	④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신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승인 가속화
	⑤ 셰일가스 탐사・개발 규제 완화
	⑥ 석유 시추 관련 수압파쇄(프래킹) 환경규제 철폐
인프라 건설	⑦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
	⑧ 극지방 원유 개발 촉진 및 파이프라인 설치
	⑨ 미국-캐나다 원유수송사업(Keystone XL 파이프라인) 재개

※ 출처: 언론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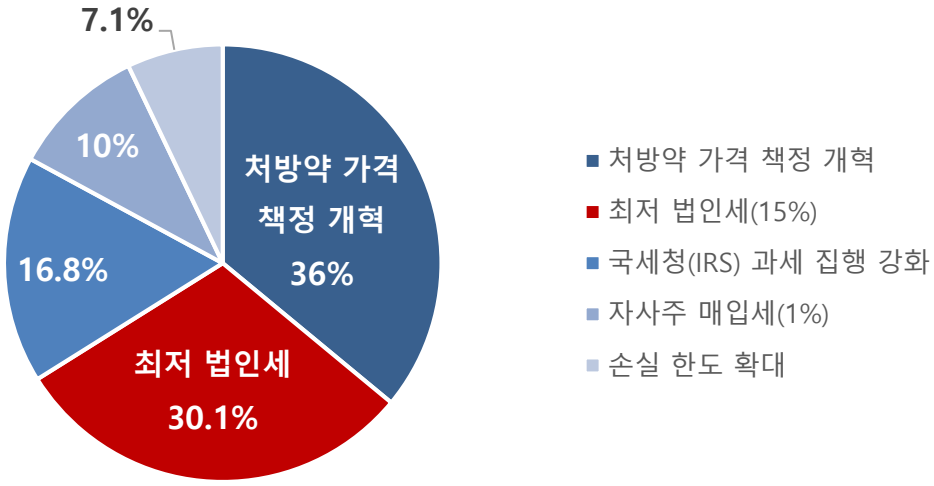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국내 산업으로는 ▲시추 및 건설 관련 기계 장비 수출 증가 ▲화력발전 관련 가스터빈 수출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2. IRA 법안 폐기 및 축소 가능성

○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IRA 법안이 폐기 및 축소될 가능성 높음**

- 美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및 인플레이션 감축을 목적으로 2022년 8월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해 옴
- 더불어 IRA 재원 조달을 위해 3년 평균 10억 불 이상 수익 기업 대상으로 2023 과세연도부터 최저 법인세율 15%를 부과했으며, 향후 10년간 최저 법인세율 적용을 통한 세수는 IRA 재원 중 약 30% (약 300조 원)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IRA 재원 조달 계획]



※ 출처: 백악관

- 트럼프는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TCJA) 연장 및 영구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IRA가 TCJA에 반한다는 점 ▲IRA 법안의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 지급이 미국 자동차산업과 경제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정부지원 축소를 주장해 옴
- IRA 법안 폐지를 위해 상·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나, 비교적 간이하게 제정될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법안 무력화가 가능
- 다만 미국의 거대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근 입장을 전환하여 IRA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의 IRA 폐지·축소 기조와 충돌이 예상됨

○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전기차 확대 정책 철회 예정**

- 트럼프는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전기차 확대는 ▲전기차 산업 공급망을 지배 중인 중국으로의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전력망에 부담이 되어 보강에 수백억 달러가 소요되어 전력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고 주장
- 이에 따라 IRA 법안 축소와 더불어 전기차 전환 촉진 수단인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등 폐지 혹은 완화한다는 입장이며, 필요시 환경청(EPA)를 폐지할수도 있음

[트럼프 전기차 관련 친환경 정책]

정책	주요 내용
IRA	▪ EV 관련 보조금 축소 혹은 폐지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 CAFE 연비규제를 최소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폐지
그린뉴딜	▪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배출량 감축 기준 폐지
미국 환경청(EPA) 규제	▪ 2032년까지 전체 신차 66%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폐지

※ 출처: Agenda 47

3. 원자력 발전 촉진 정책 추진

① 원자력 발전 촉진

○ **트럼프는 저렴한 에너지원 활용 및 AI 투자 확대 위해 화석연료 시추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도 확대할 전망**

- 생성형 AI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전력 에너지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해 향후 2년 내 미국 전력 소비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AI 투자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이 언급되고 있음
- 트럼프 에너지 공약 핵심은 **저렴한 에너지원 활용해 전력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 화석연료 부활뿐만 아닌 고효율 저비용 전력 생산 수단인 **원전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
- 트럼프는 ▲원자력 발전 허가 취득 절차 간소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통해 기존 원전의 현대화를 지원해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힘

○ **원전 확대는 양당 모두 지지하는 항목으로 바이든 임기 당시 제정된 원전 관련 정책이 트럼프 2기 정부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원전 확대는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친원전 정책 시행 및 원전 발전량이 사상 최대였음을 미루어 보아 다가오는 임기에도 원전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민주당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탄소중립을 위한 Bridge 연료로 강조해왔으며 바이든 임기 당시 제정된 제도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美 바이든 행정부 원전 정책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원자력발전촉진법 (ADVANCE Act)	▪ 원전 배치 가속화 및 AI 전력 수요 해결 위해 제정('24.7) ▪ 동 법안은 ▲신규 원전 허가를 위한 절차 가속화 ▲규제 비용 절감 ▲원자력 연료 주기 및 공급망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CNC 프로그램	▪ 원전 계속 운전에 60억 달러 지불('21.11~)
ARDP 프로그램	▪ SMR 개발 및 실증에 46억 달러 지불('20.10~)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② 소형모듈원전(SMR)[25] 전환 가속화

○ **트럼프는 지속 성장 중인 SMR로의 신속한 전환 위해 정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공언**

- 올해 초 세계원자력협회는 글로벌 SMR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400조 원 → 6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SMR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SMR을 중심으로 한 원전 대규모 투자를 공언

[25] SMR(Small Modular Reacto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자유로운 입지 선정 ▲출력 조절 및 원자로 냉각용이 ▲빠른 설치 ▲저비용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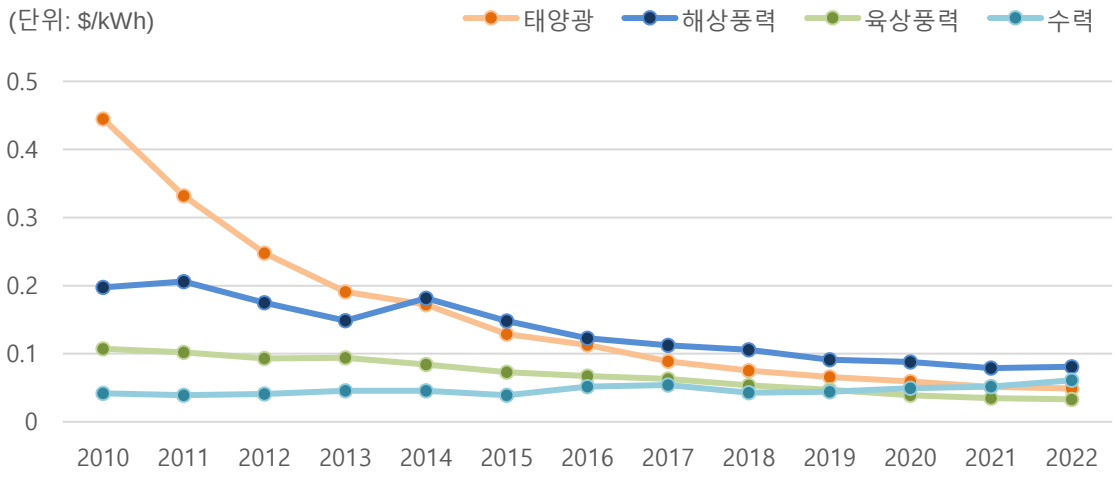
4. 향후 4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위축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동향

○ **신재생에너지가격은 지난 10년간 하향안정화, 그럼에도 화석연료로의 회귀 기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하향안정화되어 왔으며, 그중 태양광 발전 균등화발전단가(LCOE)[26] 하락으로 독일, 중국 및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Grid Parity[27] 달성에 성공해왔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

[2010~2022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 동향]



※ 출처: Our World in Data (2022)

- 트럼프는 에너지산업의 자유경쟁과 화석연료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rid Parity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 내 ▲높은 전기료 ▲기술발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여 세금혜택 의존과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전망

- 한편 2022년 8월 IRA 통과 후 미국에서 발표된 투자액 3460억 달러(약 460조 원) 중 78%가 공화당 지역구에 배정된 만큼 IRA 철회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6] LCOE는 발전시설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Grid Parity 달성 여부를 논하고 있음

[27] Grid Parity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 비용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기생산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

② 태양광 발전

○ **트럼프의 IRA 폐지(축소) 기조는 국내 태양광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IRA 법안에는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데, 트럼프는 IRA 폐지(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중인 한화솔루션, OCI 등 국내 기업의 보조금 수령 규모 축소가 예상되어[28] 태양광 산업 투자 위축 및 성장 둔화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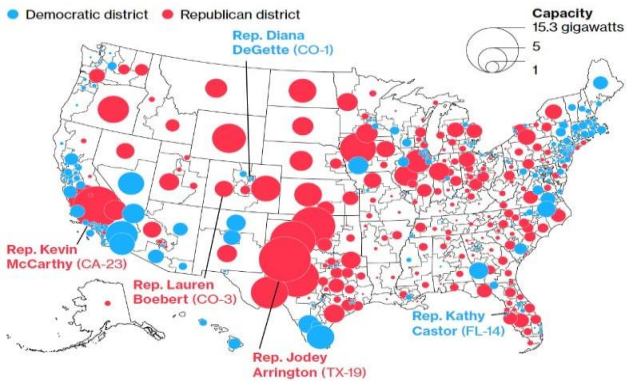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부문 IRA 세제 혜택]

프로그램	주요 내용
생산세액공제 (PTC)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판매 시 세액공제 ▪ **[태양광&풍력]** 2024년 기준 ¢2.75/kWh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AMPC)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부품 등 첨단제조기술 활용 제품을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판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 폴리실리콘: $3/kg ▪ **[풍력]** 블레이드: ¢2/W, 나셀: ¢5/W, 타워: ¢3/W 등

○ **다만, 태양광발전소가 공화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보조금의 완전한 중단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공화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신재생 관련 투자로 인한 수혜는 공화당 지역이 받게 되므로 트럼프 입장에서 ▲IRA 법안 폐기 ▲태양광 산업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음

[美 주별 풍력·태양광·그리드배터리 공공사업 운영(계획) 규모]



※ 출처: Bloomberg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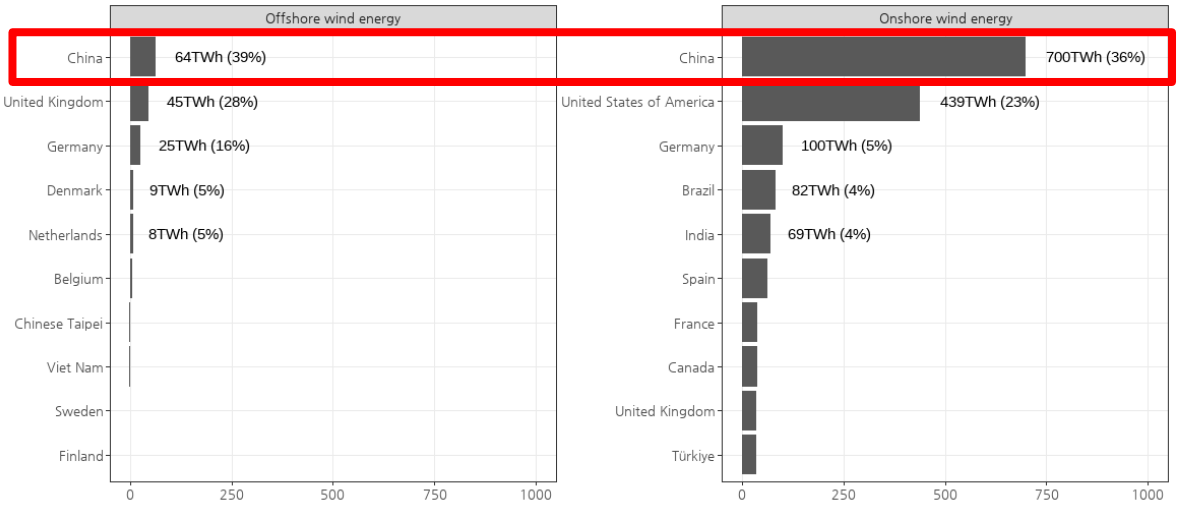
[28]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사업을 영위해 올해 1분기 AMPC 보조금 966억 원 수령

③ 풍력 발전

○ **트럼프는 풍력발전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을 선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해 풍력발전을 화석연료 또는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 풍력발전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미국 전체 전력생산 중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량이 타 신재생에너지 대비(수력(6%), 태양광(5.6%)) 우세한 상황
- 다만, 풍력발전 에너지가격은 타 신재생에너지 대비 높은 경향이 있어 "저렴한 에너지"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 풍력발전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은 ▲해상풍력(Offshore wind) ▲육상풍력(Onshore wind) 두 분야 모두에서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바탕으로 터빈 기술발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중국 견제를 위해 풍력 발전을 화석연료 또는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2022년 국가별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에너지 발전량]



※ 출처: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2024)

▶ 분석 및 시사점

○ **화석연료로의 회귀, 저렴한 에너지원 활용은 국내 정유·석유화학·원전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화석연료 공급을 증가시켜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우리 정유·석유화학업계 수요를 자극해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른 대규모 투자 및 한미 협력 증대는 K-원전 수출 확대 및 SMR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원전업계의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정책 축소 따른 IRA 보조금 혜택 종료는 국내 전기차·2차전지·신재생에너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IRA 법안을 축소·폐기할 경우 우리 전기차·2차전지업계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온 보조금 혜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으로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IRA 법안 축소 및 대중 견제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 업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전반적 산업 축소 따른 국내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중국 봉쇄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우리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발전기회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 축소를 대비해 우리 전기차업계는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로, 우리 2차전지업계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보다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른 탈친환경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좇기 보다는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2차전지, 탄소포집,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Ⅳ. 미국의 對적성국 정책

1. 지역분쟁과 미국 대외정책 전망

① 러-우 전쟁과 NATO 동맹

○ **러-우 전쟁 조기 종식을 위한 협상을 유도하고 미국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이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취임 전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
-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협상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낸 키스 켈로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장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29]
-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親러시아적 성향과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포기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30] 등은 우크라이나의 반발과 유럽 동맹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NATO 방위비 지출 확대,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미국-유럽 동맹국 갈등 예상**

-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목표치)인 NATO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며 3% 수준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온 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NATO와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NATO 32개 회원국 중 'GDP 대비 2%' 방위비 가이드라인을 달성한 국가는 23개국에 그치며 GDP 대비 3%를 넘는 국가는 미국, 폴란드, 그리스 정도에 불과(2024년 기준)[31]
- 트럼프 당선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안보지원 규모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29] Trump handed plan to halt US military aid to Kyiv unless it talks peace with Moscow(Reuters, 2024.6.26)
[30] Inside Donald Trump's secret, long-shot plan to end the war in Ukraine (The Washington Post, 2024.4.7)
[31] 트럼프, NATO 방위비 지출 GDP 3%로 인상 요구..."현 2%는 도둑질"(한국경제신문, 2024.8.27)

② 중동분쟁 및 對이란 정책

○ **親이스라엘·사우디 정책을 추진하고 중동지역 내 미국 역할 최소화 가능성**

-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하마스·헤즈볼라 공격은 물론 이란 핵시설 타격 권리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親이스라엘 정책기조[32]가 이어질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빈 살만 왕자와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우호적 관계 설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중동 분쟁지역에서 미군의 개입은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
-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MEI)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와 對이란 강경책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트럼프 집권 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가 예상되나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33]

○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봉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대통령 재임 시절 오바마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란과 합의했던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34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對이란 제재를 강화. 이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확대로 대응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바 있음
- 대선 유세기간중에도 이란에 대해 "핵무기를 손에 넣기 직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란이 핵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주장
-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중 발생한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다 헤즈볼라, 예멘 후티반군에 대한 이란의 지원 등을 이유로 집권 후에도 이란에 대한 제재·봉쇄 중심 정책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음

---

[32]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며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

[33] Comparing Harris and Trump on Middle East policy(MEI, 2024.9.27)

[34] JCPOA는 이란이 ▲최소 15년 간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 이하로 제한 ▲저농축우라늄 재고 축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미국, EU는 對이란 경제, 금융, 에너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③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책

○ **북-미 정상외교 추진 및 '단계적 거래'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시도 가능성**

-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강조하면서 재집권 시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복원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핵 문제 해결 능력을 과시하고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긴장을 낮추기 위해 북한과 정상급 양자외교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35]
-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에 '화염과 분노' 대신 제재 완화라는 '당근'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낼 공산이 크다"고 분석
-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있어 서울보다는 평양이 전진기지로서 가치가 훨씬 크다"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있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분석[36]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한국의 부담 증가 가능성 높음**

- 한미 양국은 10월 초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키로 합의
- 미국의 경우 의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이 SMA 협상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협상 시 한국의 부담 증가 불가피
-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35 "트럼프 재선 땐 김정은과 정상 외교 재개" (세계일보, 2024.10.3)

36 정세현 "트럼프 당선? 김정은에겐 별의 순간" (노컷뉴스, 2024.10.10)

▶ 분석 및 시사점

○ **러시아의 위협을 실감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방위력 증강사업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러-우 전쟁 종결이 국내 방산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글로벌 방산 수요가 둔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방산물자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산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할 경우, 한미 간 방산협력이 후퇴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에 따른 NATO와 동맹국의 방위비 증가는 국내 방위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NATO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방산업계에 유럽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에 따른 세계 각국의 자주국방 강화 정책은 글로벌 방위비 증가로 이어져 한국산 무기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 시 국내 건설사와 기계·발전기업들은 관련 시장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우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이 추진될 경우 건설, 기계장비, 발전 관련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력관계 심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Ⅰ. 반도체

Ⅱ. 자동차

Ⅲ. 이차전지

Ⅳ. 철강

Ⅴ. 정유·석유화학

Ⅵ. 원자력 및 SMR

Ⅶ. 신재생에너지

Ⅷ. 방위산업

Ⅸ. 건설업·건설기계

참고 주제별 국내 산업 영향

산업	주제	참고 페이지
① 반도체	통상압력	38~40쪽
② 자동차	통상압력	38~40쪽
	화석연료 부활	45~46쪽
③ 이차전지	화석연료 부활	45~46쪽
④ 철강	통상압력	38~40쪽
⑤ 정유·석유화학	화석연료 부활	42~44쪽
⑥ 원자력 및 SMR	화석연료 부활	47~48쪽
⑦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부활	49~51쪽
⑧ 방위산업	적성국가 외교	53~56쪽
⑨ 건설업·건설기계	적성국가 외교	53~56쪽

Ⅰ. 반도체

○ **트럼프의 강력한 중국 봉쇄 정책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전방산업 내 중국 기업의 위축은 국내 기업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트럼프는 글로벌 반도체의 ▲설계-미국 ▲장비-네덜란드 ▲생산-한국·대만 ▲소부장-일본 분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인력, 투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역임한 윌버 로스는 미국의 지식재산과 기술이 포함된 제품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대해서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반도체 관련 대중 압박은 후방산업까지 확대될 수 있음
- 트럼프의 對中 반도체 봉쇄 정책은 de-coupling을 통해 중국 반도체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스마트폰 기업 뿐만 아니라 AI, 자율주행 등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히 프리미엄 반도체와 후방산업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됨
-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CHIPS법 개정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관련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축소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CHIPS Act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준비된 점 ▲중국 봉쇄의 목적이 첨단 공정 제조 기반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의 중국 de-coupling 전략은 반도체 value-chain상 분업화된 우방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

- 미국은 반도체 설계(fabless) 분야에서는 강국이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와 제조 시설(foundry)은 네덜란드, 한국, 대만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중국 봉쇄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 각국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이들 국가의 자국기업 보호 기조에 따라 트럼프의 대중 규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 일례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올해 1분기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였는데(49%), 이는 구형장비인 심자외선(DUV) 장비를 중국이 대량 수입한 영향이 크며, 이에 ASML도 첨단 장비의 對中 수출 제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Ⅱ. 자동차

○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강화 정책은 내연기관으로의 회귀 정책과 더불어 국내 기업에 악재로 평가됨**

- 미국은 국내 자동차 수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의 對美 자동차 수출액은 2024년 상반기 전체 자동차 수출액 370억 1천만 달러 중 절반에 가까운 184억 5천만 달러를 기록

- 2023년 우리나라의 對美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가 50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약 15.5%를 차지하는데, 최근 전기차 시장의 chasm에 따른 수요 감소와 트럼프의 내연기관 회귀 정책으로 자동차 전동화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국내 자동차 對美 수출액]



※ 출처: 한국무역협회(연합뉴스)

- 또한 트럼프는 중국산 자동차 외에도 중국 자본이 투입된 우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전기차 부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반에 대해 중국산이 사용될 경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내 자동차 기업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의 추가 관세 및 내연기관 회귀 정책 대응을 위해 통상외교 해법과 기술적 대응이 필요**

- 미국의 자동차 추가관세 저지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예외국 지정, FTA 수정 등 정부차원의 통상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트럼프의 내연기관으로의 회귀 정책 대응을 위해 내연기관이 포함된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또는 최근에 전기차 대안으로 부상한 EREV[37] 등 차량 동력원의 기술적 다변화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무역 장벽 강화 우려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함**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 美 자동차산업 보호 명분으로 한국이 보편관세(10%) 부과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자동차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 따라서 정부 및 업계 차원에서의 ▲국산차 고율 관세 부과 회피 노력 ▲현지 제조시설 부품 및 중간재 원산지 규제 등 대응 지원 확대가 필요
- 더불어 미국 등 특정국에 대한 수출 및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공급망 확충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동맹국 및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강화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7] Extended-Range Electric Vehicle: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차

Ⅲ. 이차전지

○ **미국의 IRA 법안 시행 따른 현행 환경규제 대응 위해 한국 2차전지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설비 구축 및 투자를 진행**

- IRA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배터리 부품 등 첨단제조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경우 보조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
- 동 법안은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 큰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여 한국 주요 2차전지 기업이 미국 내 생산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해 왔음

[국내 2차전지 3사 미국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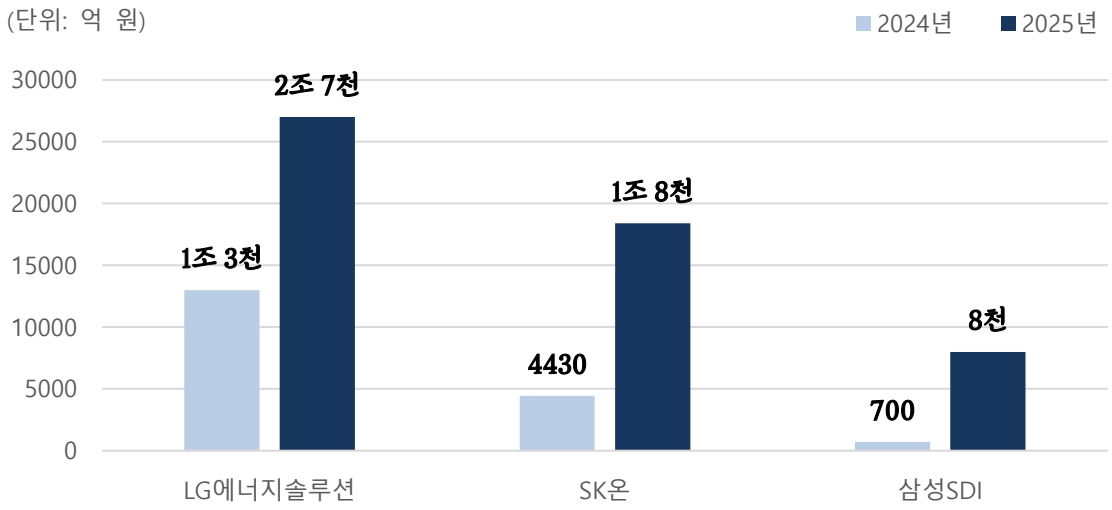
기업명	생산형태(합작/단독)	지역	가동 시기
LG 에너지솔루션	GM	오하이오	가동 중
		테네시/미시간	2024
	Honda	오하이오	2025
	현대차/기아	조지아	2026
	단독	미시간	가동 중
		애리조나	2025
SK온	Ford	테네시/켄터키	2025
		켄터키	2026(연기)
	현대차/기아	조지아	2025
	단독	조지아 1·2공장	가동 중
삼성SDI	스텔란티스	인디애나 1공장	2025
		인디애나 2공장	2027
	GM	인디애나	2026

※ 출처: 삼일PwC경영연구원

○ **한국은 IRA 최대수혜국으로 국내 2차전지 업계의 IRA 보조금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美 바이든 행정부 IRA 도입 이후, 한국 기업은 IRA 전체 보조금 가운데 32%인 약 349억 달러(48조 원)를 수주하여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 특히 2차전지 관련 투자금액이 약 302억 달러(42조 원)를 차지해 AMPC가 국내 배터리 3사의 영업실적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음
- LG에너지솔루션은 AMPC 보조금을 영업이익에 반영해 가까스로 적자를 면하고 있으며 SK온은 출범 이래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AMPC 영향력이 매우 절대적[38]
- 더불어 매 분기 AMPC 보조금 수령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공장들이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국내 배터리3사의 AMPC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한국 배터리3사 AMPC 보조금 수령액 전망]



※ 출처: 조선비즈

[38] 삼성SDI는 미국 내 공장 가동 전으로, LG에너지솔루션 및 SK온 대비 AMPC 수령액이 현저히 적음

○ **트럼프 재집권 따른 IRA 법안 축소로 국내 2차전지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한국은 IRA 배터리 요건 시행 따른 ▲시장점유율 상승 ▲AMPC 통한 수익 증대 등 IRA 기대효과에 힘입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왔으나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IRA 보조금 축소로 배터리 수요 위축 및 2차전지 업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더불어 2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소재 수요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 배터리기업과 미국에 동반 진출한 국내 소재 기업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한국신용평가는 트럼프 재집권 따른 IRA 축소 등 정책변화 및 환경규제 완화가 한국 산업 중 **"2차전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트럼프 2기 따른 주요 정책별 한국 산업 영향]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정책변동 영향 (IRA 축소)	2차전지	▪ 자동차	▪ 정유 ▪ 민자발전 ▪ 석유화학 ▪ 철강 ▪ 조선 등	-	-
환경규제 완화 (화석연료 개발)	2차전지	-	▪ 자동차 ▪ 메모리 반도체 ▪ 방산 ▪ 철강 등	▪ 민자발전 ▪ 석유화학 ▪ 조선	정유

※ 출처: 한국신용평가

- 전기차 성장이 둔화될 경우 자동차업계에서는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등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나, 배터리업계는 전기차 수요에만 76.4% 의존하고 있어 2차전지 업계의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국내 2차전지 기업은 ▲북미 수요 전망을 반영한 사업계획 조정 ▲에너지저장장치(ESS), 차세대 모빌리티 등 신수요 창출 위한 시장 발굴 ▲국내 투자 촉진 위한 인력 및 세제혜택 등 정책 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 노력이 필요

○ **IRA 보조금 혜택 종료 따른 한국 주력산업으로의 피해가 우려되어 관련 업계에서는 대비 필요**

- IRA 법안의 수혜 대상은 기업과 소비자로 양분되며,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각종 보조금 축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현재 한국 기업이 수취하고 있는 ITC/PTC 혜택 및 AMPC 보조금 종료가 예상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따라서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전기차, 2차전지 등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IRA의 AMPC 혜택 폐지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 있음

[IRA 법안 내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 주요 세제 혜택]

대상	프로그램	주요 내용
기업	투자세액공제 (ITC)	▪ 신재생 에너지 설비나 기술에 투자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정 비율 공제 ▪ 투자만으로도 세제 혜택 수령 가능
	생산세액공제 (PTC)	▪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일부를 공제 ▪ 전력 발전량에 따라 세제 혜택 제공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39] (AMPC)	▪ 배터리 부품 등 첨단제조기술 활용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 판매할 경우 보조금 지급 ▪ 배터리 셀은 1kWh당 $35, 배터리 모듈은 1kWh당 $10 지급
소비자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22.8~)	▪ 북미 3개국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전기차 가운데 ▲밴, SUV, 픽업트럭은 $8만 ▲세단 등 이외 승용 차량은 $5.5만 이하 전기차 구매 시 대당 $7,500 세액공제 ▪ '24년 기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 광물은 50% 이상 북미에서 추출 ('29년까지 90%로 상향) ▪ '24년 기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은 60% 이상 북미에서 제조 ('29년까지 100%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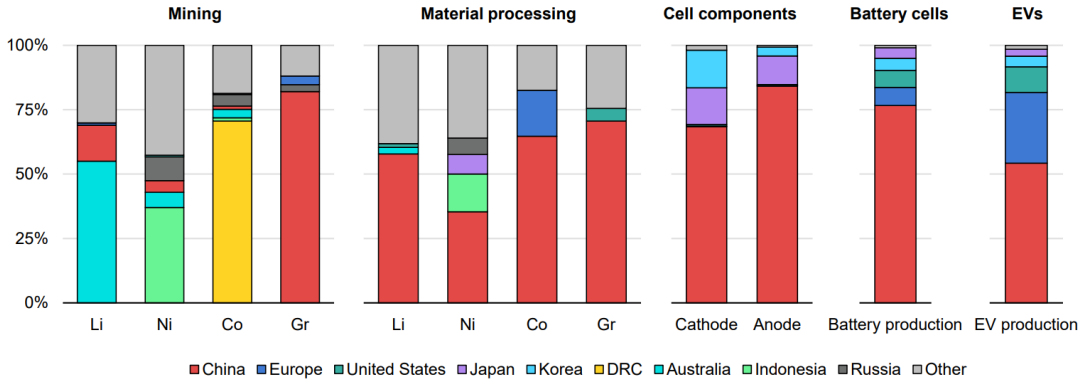
※ 출처: 언론보도 종합

[39]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 첨단제조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됨

○ **국내 2차전지 관련 업계는 ▲배터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협력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2차전지 공급망 내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전세계 곳곳에서 채굴되나, 광물가공설비(Material processing) 대부분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배터리 부품(Cell components) 전반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對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外 국가로 공급망 다각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함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 현황]



※ 출처: IEA (2022)

※ 용어: Li(리튬), Ni(니켈), Co(코발트), Gr(흑연), Cathode(음극재), Anode(양극재), DRC(콩고)

– 특히 핵심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40]에서 조달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

[40] 미 FTA 체결국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모로코, 멕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온두라스, 요르단,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캐나다, 파나마, 페루, 한국, 호주 총 20개국

Ⅳ. 철강

○ **바이든 정부의 철강 수입 장벽은 트럼프 1기에 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것으로, 트럼프는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1기 정부가 개정한 것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FTA를 통해 무관세가 적용되어 중국 등 제3국의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로로 활용되어 왔음
-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7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 미국에서 제강되지 않은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의 철강 수입 관련 규제를 계승할 것으로 보이나, 232조 개정을 통해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강화될 경우 국내 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232조 시행에도 對美 철강 교역에서 지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의 규제완화 협상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국내 철강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기업의 덤핑, 국내 기업의 사업 확장 한계로 간접적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당시, 관세 대신 FTA 수정을 통해 연간 수출 물량 쿼터(263만톤)를 적용받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멕시코를 통한 대미 우회 수출물량은 6만5400톤 수준으로 전체 수출량의 2.5% 수준에 불과하여 금번 바이든 정부의 232조 강화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트럼프가 중국 철강제품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매년 물량 쿼터를 대부분 모두 사용하고 있어[41]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산 철강 제품이 국내에 진입하면서 덤핑행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철강 업체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관세 회피를 위해서는 미국내 철강 생산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법인 신설보다 미국내 기존 기업 인수가 합리적이나, 공화당, 민

[41] 연간 263만톤의 물량 쿼터 시행 이후 2018~2023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연평균 261만톤

주당 모두 미국철강노조(USW)의 반대를 의식해 미국 철강 기업의 해외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42], 향후에도 해외 기업의 미국내 철강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42] 2023년 12월 일본제철이 미국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밝혔으나, 바이든, 트럼프 모두 반대 입장을 보임

Ⅴ. 정유·석유화학

① 정유업계

○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국내 정유사 영업실적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 국내 정유사 영업실적은 2022년 이후 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크게 상승했으나, 트럼프 집권 따른 유가 하락으로 단기에는 국내 정유사의 실적 부진이 예상됨
- 유가의 급격한 하락은 정유사의 재고 손실 및 정제마진 축소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기업의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유가가 안정화될 경우 Official Selling Price (OSP)[43] 하락이 예상되어 정유업계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지므로, 국내 정유업계의 사업·재무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 **미국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정유업계의 수혜가 증대될 수 있음**

- 트럼프는 화석연료 회귀 정책을 통해 ▲전기차 의무명령 중단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에 세액공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석유제품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음
- 더불어 ▲미국의 정제설비 규모는 '20년 고점 대비 3.4% 축소 ▲미국 석유제품 재고가 과거 평균을 하회 중이므로 단·중기적 미국의 석유제품 부족은 글로벌 정제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국은 전세계 5위 규모의 정제 설비를 갖추었으며, 전체 생산 물량 중 수출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50%)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국 수출 물량 증가 등 국내 업계로의 수혜가 예상됨

[43]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산 원유 도입 시 부담하는 프리미엄

② 석유화학업계

○ **트럼프는 석유화학제품 관련 규제 정책 폐기를 공언하고 있어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대미수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2021.11월 미국 내에서 특정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슈퍼펀드세 복원 법안에 서명
- 최근에는 2035년까지 연방정부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 중단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트럼프는 기존의 석유화학제품 관련 규제 정책 폐기를 공언하여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대미수출 수요가 증가할 여력이 있음
- 한국신용평가는 "국내에서 북미 지역으로의 석유화학제품 수출 물량은 2023년 연간 약 300만 톤"이라며 "절대적으로는 크지 않은 규모지만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내 석유화학 수요 개선 시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 **화석연료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트럼프도 "탄소포집"에는 우호적으로 화석연료로 배출된 탄소를 적극 활용하는 CCUS 기술 지속 확대 필수**

-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이하 'CCUS')[44]은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활용, 저장함으로써 "화석연료 부활"에도 탄소중립을 가능케 해 주요 친환경 수단으로 거론됨
-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극 활용하는 산업군은 에너지 및 석유화학, 정유산업으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CCUS 지속 개발은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국내 산업 기술 확보 및 기술력 제고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됨
- 더불어 2020년 말 트럼프가 서명한 USE IT Act[45]이 바이든 임기에도 유효해 CCUS 및 CO_2 파이프라인의 신속한 승인이 가능해 업계 성장이 지속될 예정
- 또한 美 거대 석유화학기업 엑손모빌은 세계 최대 블루수소・암모니아[46] 공장을 건설 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탄소포집을 활용한 블루수소・암모니아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국내 업계 차원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해 보임

---

[44]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된 탄소를 포집(Capture),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는 기술로,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된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S, 포집한 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CCU를 포괄

[45] CCUS 및 CO_2 파이프라인 개발 촉진에 기여

[46]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및 암모니아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美 거대 석유화학기업의 CCUS 확대 지속 vs. IRA 등 친환경 정책 폐기"가 상충하고 있으나, 한국은 IRA 향방과 무관하게 CCUS 지속 확대 필요**

- IRA는 CCUS 시설 개발·투자·생산 지원을 위한 '45Q 세금 공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Global CCS Institute는 IRA 시행으로 미국 내 탄소포집 시스템이 2030년까지 13배 성장할 것으로 분석
- 美 거대 석유화학기업들은 2022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RA 법안이 통과될 당시 이를 두고 비판하였으나, IRA 세액공제를 통해 저탄소에너지 프로젝트에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자 IRA에 의존해 사업 방향을 전환해 옴[47]
- 더불어 美 에너지부는 청정 기술 및 프로젝트 지원 위해 약 4천억 달러(5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트럼프 집권 따른 혜택 축소 시 사업계획 차질 예상
- 이들 기업은 ▲사업계획 차질 ▲IRA 등 금전 혜택 부재를 염려해 트럼프에 IRA 보전을 요청하고 있어 IRA 법안의 실질적 폐기 가능성에는 의문이 더해지고 있으나, 韓기업은 IRA 법안 존폐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계적으로 주시 중인 CCUS 기술 개발 지속 필요

[IRA 법안 향방 따른 한미 탄소포집 기술에의 시사점]

시나리오	미국	한국
① IRA 지속	▪ IRA 보조금이 지속되어 탄소포집, 수소, 바이오연료 등 저탄소에너지 기술 투자 지속 ▪ 친환경 마케팅 전략으로 CCUS 기술을 지속 활용	▪ CCUS 기술 지속 성장 따른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적극 투자 및 R&D 노력이 필요**
② IRA 폐지(축소)	▪ 친환경 전략 약화 ▪ 사업계획 차질 불가피 ▪ 미국 석유화학기업들이 친환경 바이오·재활용 플라스틱 분야 전환 속도를 늦출 가능성 존재	▪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인 CCUS 기술 투자 및 R&D를 지속함으로써 **시장 선점을 통한 중장기적 반사이익 추구 필요**

[47] 엑손모빌, 쉐브론은 IRA 법안 혜택에 힘입어 ▲탄소포집 ▲수소 ▲바이오연료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300억 달러(약 40조 4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

○ **트럼프 당선으로 액화천연가스(LNG) 트렌드 부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LNG 발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

- 바이든은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근거로 LNG 수출 승인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트럼프는 임기 시작 즉시 ▲에너지부의 LNG 수출 프로젝트 개입 중단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부터 수출 프로젝트 승인 시작하겠다고 약속
- 더불어 LNG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화석연료에 속해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Bridge 역할을 수행해 트럼프 임기 동안 LNG 발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 중 한화에너지는 24조 원(약 175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리오그란데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등 LNG 부문에서의 한미 협력 기회가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더불어 미국의 ▲LNG 프로젝트 가속화 ▲중국 조선업 견제 심화로 LNG추진선 및 LNG 컨테이너선 수주 기회가 더욱 증대되어 국내 조선업계로의 수혜도 기대됨

VI. 원자력 및 SMR

○ **親원전 성향의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美 원전 업계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K-원전 수주 증가 등 국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트럼프는 美 원전 산업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원전 건설 촉진 예정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해외 원전 사업 실적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건설업계 및 에너지기업으로의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對중·러 견제 수단으로 운영하는 FIRST에 따른 한미 SMR 공동 수출이 트럼프 2기에도 지속될 경우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원전 시장 점유에 대응하기 위해 SMR 도입 희망국을 대상으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FIRST[48] 프로그램을 시행해 한국도 참여하고 있음
-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FIRST 등의 정책적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시공 및 운영 부문에서 미국과 함께 제3국 대상 SMR 공동 수출을 추진해 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SMR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SMR 공동 수출 등 해당 부문에서의 한미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였음

○ **韓·美 SMR 사업 협력 증대에 따른 SMR 해외수주 증가가 예상됨**

- 현재 국내 건설사 전반이 SMR을 주력 신사업으로 간주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미 간 SMR 사업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음
- 한미 SMR 기업 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설계역량과 시공능력의 차이이며, 이중 미국은 설계분야에, 국내 기업은 시공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양국 간 SMR 사업 협력 증대 및 SMR 해외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8]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R Technology

[한미간 주요 SMR 사업 현황]

기업명	美 협력사	현황
두산에너빌리티	X-energy	▪ X-energy 주기기 제작설계 계약 체결 (2021) - 주기기 및 시제품 제작, SMR 설계 최적화 지원
	NuScale Power	▪ Nuscale[49] 지분투자,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2019) - 모듈의 제작성 검토 및 주기기 제작
삼성물산	NuScale Power	▪ NuScale Power과 협력 위해 7,000만 달러를 투자
현대건설	Holtec International	▪ Holtec Int.와 사업협력 계약 체결 (2021) - SMR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Teaming Agreement 통해 미국 SMR 최초 호기 설계를 추진 ▪ '26년 건설 개시, '29년까지 완공 및 전력생산 예정
현대ENG	USNC	▪ 한국원자력연구원, USNC와 MOU 체결 (2020) - 초소형모듈원자로의 무탄소 전력, 열·수소 생산 및 공급 기술 강화에 5년간 협력
SK그룹	TerraPower	▪ TerraPower에 2.5억 달러 투자 (2022) - SK, SK이노베이션, 한수원 공동 TerraPower의 345MVe급 SMR 실증 및 상용화 추진

※ 출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및 언론보도 종합

[49] NuScale Power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승인 받은 유일한 SMR 기술을 보유

Ⅶ. 신재생에너지

① 태양광 발전

○ **트럼프의 화석연료 회귀 정책은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美 정부의 중국산 수입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태양광발전 기업으로의 반사이익 수혜 가능성도 존재**

- 중국은 2019년 태양광 발전에서 최초로 "Grid Parity"를 달성하여 글로벌 태양광산업 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2023년 유럽의 전체 태양광 모듈·전지 수입액 중 중국산 제품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는 대중 견제 수단 중 하나로서 "태양광발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에 본사를 설치해 우회수출을 통해 관세를 피해왔으나 대중 견제를 이유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상계관세[50] 최소 2.85%~최대 23.06% 부과를 결정
- 트럼프가 태양광 산업에 상계관세를 적용할 경우 對美 태양광 제품 수출기업은 태양광 모듈 및 전지에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산→한국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한화큐셀 ▲OCI홀딩스 등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조은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산 청정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세 인상과 우회수출 금지는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서도 "중국의 수출 다변화로 인해 미국 외 시장에서 경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임
- 한편 정경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대폭 올리면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예비 결정과 유사한 수준일 수 있다"고 설명함

[50] 수입품이 국내산 제품과 경쟁할 경우 국내산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② 풍력 발전

○ **트럼프는 풍력발전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 및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에너지 생산·사용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美에너지부의 친환경 발전 규제와 풍력 보조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에너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입장을 보여 ▲풍력산업 위축 ▲IRA 풍력 보조금 축소가 예상
- 이는 풍력발전 타워 제작에 강점을 가진 CS윈드와 하부구조물에 특화된 SK오션플랜트 등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

Ⅷ. 방위산업

○ **러-우 전쟁 조기 종결 시 국내 방산업계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축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협상을 통해 장기 휴전 또는 조기 종전이 성사될 경우 글로벌 방산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방산업체의 투자 결정에 있어 내수보다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바, 방산 수출이 둔화될 경우 기업 투자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51]

○ **한·미 방산협력 후퇴 및 중동 방산시장에서 경쟁 심화 가능성**

- 트럼프 정부는 미국산 우선구매제도(Buy American),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과 NATO, 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는 물론 한미 간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음
- 또 親사우디 성향을 드러내온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후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중동 방산시장에서 우리 방산기업과 미국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에 따른 동맹국 방위비 증가, 글로벌 군비 확대 경쟁은 국내 방위산업에 기회 요인**

- 우방국 방위에 미국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반대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성향은 각국의 자주국방 강화와 글로벌 방위비 증가로 이어져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52]
- 트럼프 당선인은 NATO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 방산업계에 유럽발 수주 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국방비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또 국방비 상위 11국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51]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73호(산업연구원, 2024.10.7)

[52] 2024 미국 대선, 유리해진 해리스(NH투자증권, 2024.9.12)

[2019~2023년 국방비 지출 증가 상위 10국]

	국가	증가율
1	우크라이나	827%
2	키르기스스탄	199
3	남수단	194
4	폴란드	112
5	라이베리아	110
6	콩고민주공화국	110
7	부르키나파소	95
8	베냉	83
9	핀란드	83
10	헝가리	83

[국방비 상위 11국의
2022년 대비 국방비 지출 증가율]

국방비 규모 순위		증가율
1	미국	2.3%
2	중국	6
3	러시아	23.5
4	인도	4.2
5	사우디아라비아	4.3
6	영국	7.9
7	독일	9
8	우크라이나	50.7
9	프랑스	6.5
10	일본	10.7
11	한국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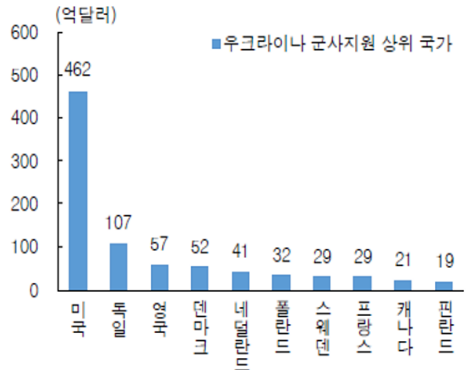
※출처: SIPRI, 조선일보(2024.8.4)

IX. 건설업·건설기계

○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및 재건 추진 시 국내 관련 기업 수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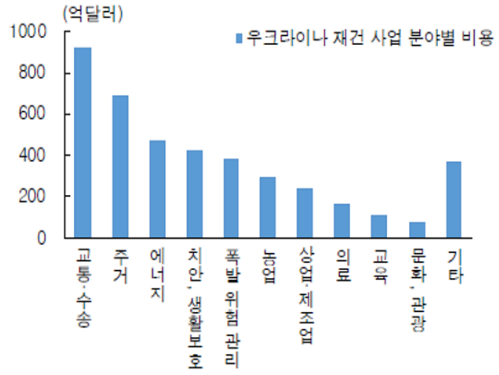
-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이 종결될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3~2033년 간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금액은 총 4863억달러로 추산되며 주택(803억 달러), 교통(737억 달러), 에너지(471억 달러) 인프라 재건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지난 2월 주요 7개국(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53]'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 우크라이나 재건이 추진될 경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건설, 기계장비, 발전, 인프라 분야의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54]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국가(22.02~24.02)



자료: 키엘연구소, 한국투자증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비용(23년 추산)



자료: 세계은행, 유엔, 우크라이나 정부 등, 한국투자증권

[53] MDCP : 우크라이나 재정지원과 중장기 재건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 G7 회원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하고 있음

[54] 트럼프 수혜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한국투자증권, 2024.7.22)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국내 기업]

기업명	사업 내용
HD현대인프라코어	▪ 건설중장비, 엔진 등을 생산 및 판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21톤급 휠 굴착기 기증
HD현대건설기계	▪ 기존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이 인적분할돼 재상장.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30톤급 크롤러굴착기 기증
삼부토건	▪ 국내외 건설사업 영위. 지난 6월 우크라이나 호로독시와 스마트시티 4.0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
SG	▪ 국내 아스콘 1위기업.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주의 도로 재건 사업을 위한 아스콘 포장 실증 테스트 진행 예정
현대에버다임	▪ 산업기계 및 소방특장차 전문기업. 우크라이나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 양산 본격 돌입
다산네트웍스	▪ 통신장비 개발 및 공급기업. 2023년 우크라이나 전력 및 통신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발표
진성티이씨	▪ 건설중장비 부품 제조기업. 미국기업 캐터필러 굴삭기의 하부주행체 부품 납품
동일고무벨트	▪ 건설 및 농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크롤러 생산기업. 고객사로 미국기업 캐터필러를 보유

※ 출처: 한국투자증권(2024.7.22)

EoD

CONTACT



김동수 변호사
조세 부문

02-528-5219
dskim@yulchon.com



문일봉 변호사
송무 부문

02-528-5251
ibmoon@yulchon.com



박성범 변호사
공정거래 부문

02-528-5840
sbpark@yulchon.com



박주봉 변호사
부동산 건설 부문

02-528-5230
jbpark@yulchon.com



손도일 변호사
IP & Technology 융합 부문

02-528-5836
dison@yulchon.com



신영수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02-528-5514
ysshin@yulchon.com



은성욱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02-528-5305
sweun@yulchon.com



염용표 변호사
송무 부문

02-528-5224
ypyeom@yulchon.com



조상욱 변호사
노동팀

02-528-5355
swcho@yulchon.com



신동찬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02-528-5356
tcshin@yulchon.com



이재근 변호사
송무 부문

02-528-5596
jaklee@yulchon.com



손금주 변호사
IP & Technology 융합 부문

02-528-5094
kjson@yulchon.com



김남호 변호사
부동산 건설 부문

02-528-5465
nhkim@yulchon.com



김근재 변호사
조세 부문

02-528-5572
kjkim@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IP & Technology 융합 부문

02-528-5284
yhyoon@yulchon.com



박재현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02-528-5636
jpark@yulchon.com



이진국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02-528-5386
jklee@yulchon.com



박재우 변호사
노동팀

02-528-5682
parkjw@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공정거래 부문

02-528-5724
smjung@yulchon.com



김선희 변호사
IP & Technology 융합 부문

02-528-5838
kimsh@yulchon.com



박준모 외국변호사

02-528-5773
parkjm@yulchon.com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02-528-5806
junyoungchoi@yulchon.com